

Left21.com

2010년 11월 27일 ~ 12월 10일 | 제45호 | 값 1,800원

리포트21

대북 강경책을 빌미로 현대차 파업 공격 말라

11월 23일 낮 2시, 북한군은 연평도를 공격했다. 이 공격은 북한이 지난 주말 미국 과학자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다음에 벌어진 것이었다. ▶ **관련기사 3면**

북한 정부는 이것이 한국 정부의 '호국'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 발표했다. 그것이 사실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무고한 사병 2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민간인까지 공격해 수십 명이 다치게 하고 (지금까지) 2명을 죽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더구나 사망한 민간인 2명은 연평도에 작업 나온 노동자들이었다. 우리는 북한 지배자들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 〈파이낸셜 타임스〉 서울 특파원 크리스 올리버는 이렇게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독재자 김정일이 남한을 상대로 일련의 '승리'를 얻는 것을 통해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정치 자본을 쌓을 기회를 주고 권력 이양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북한이 진정한 사회주의나 반제국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체제임을 보여 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가 될 것이다.

전 세계 수많은 지배자들이 종종 외부 갈등을 조성해 계급 모순이 초래한 내부 갈등의 폭발을 막으려 했다(1904년 러시아 차르의 대일 선전 포고부터 1997년 한국 대선 당시 '북풍'까지). '선군 정치'를 내세운 김정은에게는 이런 반동적 행위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북한 지배자들은 세계 제국주의의 압력에 '이에

는 이 눈에는 눈'식의 군사적 경쟁으로 대응해 왔다. 스탈린 통치 아래 러시아부터 마오쩌둥 하 중국에서 오늘날 북한 정권에 이르기까지 역대 스탈린주의 정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왔다. 그들은 노동자와 서민을 쥐어짜(착취) 사회적 부의 최대한 많은 부분을 중공업 생산에 투입했다.

착취와 자본축적이 사회의 우선순위에 이르면 이들은 모두 자본주의 체제였다. 동시에,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서방 제국주의 체제의 군사력과 대결해야 했기 때문에 노동자와 서민에게 양보할 여지가 별로 없었고 독재 통치를 통해 그들을 억눌러야 했다. 북한 일당 독재 정치는 3대 세습이란 측면에서 약간 독특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후진국이 세계 제국주의 체제 압력에 반동적 방식으로 맞선 결과였던 것이다.

"전략적 무시"

둘째, 북한 지배자들의 행태에는 미국의 대북 압박이라는 좀더 장기적인 요인이 배경으로 놓여 있다.

'아들 무시' 정부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미국 정부는 6자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북한에게만 선(先)행동을 강요해 왔다. 북한이 미국을 협상장에 불러내기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제재를 더 강화해 왔다.

오바마는 자신의 대북 정책의 기초를 아예 "전략적 무시"로 정해 북한이 먼저 굴복하지 않는 이상 자신은 북한 정부와 협상을 벌일 생각이 없다고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 정부의 교역과 대북 국제 지원이 크게 제한받았다.

▶ 3면으로 이어짐



북한의 포격으로 불타는 연평도

사진 출처: 공진모형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를

"반드시 비정규직의 '비'를 빼야 한다. 그 전에는 절대 내려가지 않았다."

이것이 현재 울산 현대차 1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의 다짐이다. 법원도 인정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내건 이들의 투쟁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 **관련기사 4~5면**

투쟁은 한국 사회 밑바닥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 냉대를 당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의 폭발이다. 울산 현대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화장실도 눈치 보며 가야 했다. 온갖 설움을 견뎌야 했고,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고 절망해야 했다.

해마다 거의 3백 명이 해고됐다. 비정규직에게는 중매도 안 들어왔고, 학부모 모임, 반사회, 동창회에서도 비정규직과 그 가족들은 주눅들었다.

기업주들은 멋대로 고용하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쥐어짜 이윤을 늘려 왔고, 무엇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민주노조를 약화시켰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분열

은 노동계급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핵심 고리였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일어서면서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노조로 조직되기 힘들다던 비정규직들이 투사로 다시 태어났고, 그동안 쌓여 온 설움과 차별은 투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내 친구도 동생도 자식도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 무너지면 정규직도 무너진다'며 연대하기 시작했다. 파업은 아산·전주 공장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지지도 커지고 있다.

이 투쟁은 경제 위기 고동전가에 대한 반격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난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의 영웅적인 저항 속에 타올랐던 불길이 이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속으로 옮겨 붙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스·프랑스 노동자 투쟁이 보여 준 저항 정신이 이제 한국의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2면으로 이어짐



현대차 울산 1공장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 이매진

세상은 요지경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고 가족 전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가족이었다”

또 나왔다. 이명박의 ‘나도 왕년엔’

“우리 복지정책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강화되고 있다. 속도로는 1등이다”

망상에 빠진 이명박

“부모 부양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나라의 품격에 맞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가난한 노인들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게 좋다는

국무총리 김황식

“전투기에 의한 정밀 폭격으로 무자비한 폭격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도, 저도 아쉬워하는 부분 … 장관이 직을 걸고 그렇게 한 번 때리라”

한나라당 김장수

“[여당] 의원들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민주당이 좀더 세계에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포폰 게이트를 추궁하는

민주당 박지원

“한 장[1천억 원]만 더 썼으면 됐는데, 겨우 기백억 원 때문에 [현대건설 입찰에서] 떨어지다니 …”

정몽구의 탄식,

회장님에게 한 장은 1천억 원

“방해 세력 제거 … 저항하는 놈 2~3명”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첩에서

“할 일이 없어 계속 서 있는 게 가장 힘들다”

한 G20 자원봉사자

“태극기 불태운 거에는 난리가 나도 사람이 불타는 거에는 무심한 나라”

현대차 노동자 분신을 두고

한 네티즌이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르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을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나호 《레프트21》온라인 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섯 기사는 11/16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가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 “정규직의 연대가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건국]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분신 — 현대차 사측의 야만적 탄압이 비극을 불렀다. [금속노조] 대의대회 현장 취재 금속노조가 연대 투쟁·연대 파업을 결의하다! ’ 등이었습니다.

www.left21.com

UAE 특전사 파병

중동 평화와 한국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파병이 지난해 핵발전소 수출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의혹 제기에 국무총리 김황식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원전 수주와 파병은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의혹을 부인한 지 일주일 만에 국방장관 김태영은 지난 11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핵발전소 수출 과정에서 파병 논의가 있었다며 핵 발전소 수출과 파병이 한 묶음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서도 남기지 않고 구두로 파병 준비를 해 나갔다. 파병은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파병 절차 따위는 이명박 정부에게 요식 행위일 뿐이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때처럼 이번 파병 결정도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핵발전소와 무기 수출로 국격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중동에서 군사력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다.

이 두 국가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프랑스에서 최첨단 무기들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한국은 이라크에 파병하고



11월 7일 노동자대회에서 파병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반전평화연대(준)

아프가니스탄에는 재파병까지 강행한 친미 정부로 각인돼 있다.

중동 지역 불안정의 주범인 미국 편에서서 이익을 취하려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지난해 예멘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대

상으로 벌어진 테러처럼 한국인들이 잠재적 테러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곧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 불안정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는 것이자 평범한 한국인들의 안

전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국익’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UAE 특전사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김덕엽 반전평화연대(준) 공동간사

〈레프트21〉판매자 법정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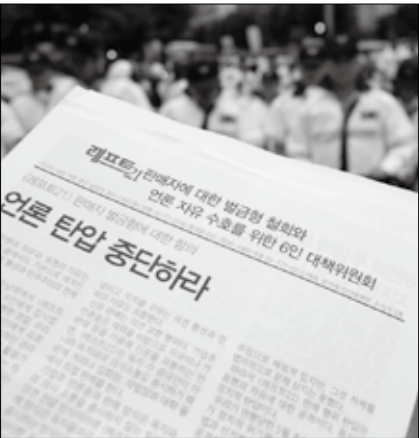
“우리 투쟁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G20 회의 전에 경찰은 강남역과 홍대입구역 등에서 〈레프트21〉거리 판매를 불허하고 방해했다. 도심 한 복판에서 〈레프트21〉의 비판적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21〉판매자 탄압에 맞서 우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투쟁은 중요하다.

우리는 계속 저항의 현장에 연대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노동자대회와 G20 항의 행동 등에도 참가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지지를 호소한 결과, 우리를 격려해 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지가 조금씩 모여 소송 비용을 5백만 원 넘게 모을 수 있었다. 이 돈은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울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주요 언론

단체들이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9일 3차 재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에는 검찰 측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법 구금하고 연행했던 경찰들이 나온다. 우리에게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고 협박했던 장본인인 경위 이종순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3차 재판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할 것이다.

김지태 〈레프트21〉판매자 범경찰 철화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
※ 자세한 사건 일지는 대책위의 블로그(http://support6.tistory.com)를 보세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를

》 1면에서 이어짐

현대차는 한국 경제와 수출을 지탱하는 핵심 작업장이자, 민주노총의 오른팔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핵심 작업장이다. 따라서 이 투쟁에 걸린 판돈은 크다.

무엇보다 지배자들은 이 투쟁의 성패가 40만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8백 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야4당과 한 면담에서 현대차 부사장 강호돈은 “이 문제가 현대차뿐 아니라 다른 완성차 공장, 조선업 등과도 연계된 문제로 현대차 임의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도 이것은 “현대차뿐 아니라 한국 노동 구조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정몽구는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이 투쟁을 짓밟으려 한다. 관리자, 경비대, 용역강패들을 동원해 미친듯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노동자들은 살점이 떨어지고 귀가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고 일주일 만에 50여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

사측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고소·고발하고 65명을 상대로



11월 20일 현대차 울산 공장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점가파업을 지지하는 집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가족대책위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모두 60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사측의 난방, 식량 반입, 수도·전기 차단 때문에 노동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잠을 자지도, 대소변을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점가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기가 막히게도 ‘연봉 4천이 넘는 노동 귀족들이 폭력을 휘두르

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친재벌 언론들은 그것을 영무새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 경찰, 노동부도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하며 정몽구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울분을 참지 못하고 11월 20일 스스로 몸을 불살랐던 황인화 동지는 병원에 찾아

온 동료의 손을 꼭 잡고 “올지마. 조금만 힘내. 꼭 싸워서 이기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자”고 말했다.

이제 우리가 이 눈물겨운 호소에 답해야 한다. 강력한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을 건설하자.

전지윤

민간인을 살상하는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북한 지배자들은 이번에 무차별 폭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 체제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행위를 하는 사회가 사회주의란 말인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사회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노동계급의 일부가 굶주림과 궁핍을 겪고 있는데 핵무기와 군비를, 또 이를 위해 중공업 생산수단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해 왔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언급한 상황, 즉 ‘한편에 자본의 축적, 다른 한편에 빈곤의 축적’이라는 상황과 딱 들어 맞는다. 북한 지배자들은 세계 체제의 경제적·군사적 경쟁 압력 속에서 대중의 생활수준을 철저히 희생시키며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를 추진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일각에서 말하듯이 “비정상 국가”나 봉건 왕조가 아니다.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경쟁과 축적의 동력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인 것이다.

미국의 후원을 받는 남한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북한 지배관료들은 중공업 성장에 몰두했고, 더 오래, 더 강도 높게 일하도록 노동자들을 몰아쳤다.

높은 착취율을 유지하려면 강도 높은 억압이 필요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노동조합 권리도 허용되지 않았다. 숙청·노동수용소·보안경찰이 정권을 떠받쳤다.

그래서 북한에서 노동자들은 사회의 주인이 아니었다. 반면 북한 관료들은 권력을 쥐고 온갖 특권을 누린다. 그들은 국가를 통해 집합적으로 노동계급을 착취한다.

노동자들의 삶을 좌우하는 주요 정책을 극소수 관료들이 비민주적으로 결정했고 권력 세습은 이런 비민주성의 절정이었다. 김정일의 ‘인민군 대장’ 칭호는 선거가 아니라 김정일의 명령으로 수여됐다.

북한 정권은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혹사하고도 윤택한 삶을 제공하지 못했

다.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수령님은 인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국유화

국유화된 경제 때문에 북한이 ‘사회주의’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관과 아무 관계가 없다.

자본주의에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상품이 지배하는 유형만 있는 게 아니다. 기업들이 거의 다 공기업 형태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회사 경영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국가는 여전히 소수 특권 집단이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자본주의이다. 비록 사기업 소유주는 사라졌지만 말이다.

실제로 제2차세계대전 중에 다양한 나라들이 국유화와 계획을 통해 전시경제를 운영했지만 그것이 사회주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국유화와 계획으로 보면 박정희 치하의 한국도 ‘사회주의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체제에 대한 가장 적합한 명칭은 국가자본주의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는 1930년대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가 주장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핵 실험을 하고 민간인을 살상하는 북한은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다.

우리에게 북한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사회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정의했다. 노동계급은 코뮌이나 소비에트 같은 자신의 민주적 기관에 기반을 두고 혁명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그런 기관에 기반을 둔 자신의 새로운 국가 권력을 건설해야 비로소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

북한 사회의 성격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회이 쓴 소책자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 북한 사회에 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다함께)을 보시오. 구입 문의는 02-2271-2395, alltogether@alltogether.or.kr로 하면 된다.

또 다함께 최일봉 운영위원회이 쓴 ‘지도자 대물림하는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도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www.kcf21.com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의 포격으로 완전 파손된 연평도 민가들

노동자 운동과 남북관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보며 누구보다 마음 조릴 사람들 중에는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있을 것이다. 희생자가 된 평범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자신들의 투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것이다.

실로 그동안 남북관계의 경색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다. 지배자들은 ‘외부의 적에 맞선 국민적 단합’을 강요하며 투쟁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실제로 지난 60년 동안 남한 지배자들은 남북관계를 내부 저항자들을 억누르고 제압하는 무기로 이용해 왔다.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존재는 독재 시절 민주주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했다.

박정희는 1976년 판문점 미군 병사 피살 사건으로 인한 긴장 고조 상황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질식시키는 데 이용했다.

1987년에 KAL기 폭발 사건은 당시 대선에서 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승리하는 데 일조했다.

1996년 9월에 김영삼 정부는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을 이용해 노동법 개악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을 단속하려 했다.

1998년 동해안에서 간첩 시체가 발견된 날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규모 연합 집회가 있는 날 아침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이 사건을 IMF 위기 고통전가와 노동자 탄압에 이용했다.

올봄 천안함 사건 때도 보수 언론은 “천안함 희생자 추모 열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급속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탄길로 가고 있다”며 공격했고 급속노조는 결국 4월 28일 파업을 취소했다.

유신 독재

남한 지배자들은 남북관계 대결만이 아니라 유화 상황도 노동자 운동 통제에 이용했다. 박정희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유화 분위기 속에 유신독재를 선포하며 종신 집권의 길을 텠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정부는 롯데호텔·사회보험 노동자들의 파업을 잔인하게 짓밟았고, 노동자 투쟁은 남북 화해 무드를 해치는 것으로 비난받았다.

이명박도 이번 연평도 사태를 국내 반대파 단속에 이용할 것이다. 벌써 이 사건은 4대강 논란,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

파문 등 이명박의 각종 악재를 가려 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노동자 운동을 단속하고 나섰다.

이것은 노동자 운동이 단지 개별 작업장이나 노사관계로만 시야를 국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긴장 구조 등 더 넓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노동자 투쟁의 전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노동자 운동은 이명박 정부가 이 사태를 위기 탈출 수단으로 이용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분명하게 저항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정부가 이 사태를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탄압하고 좌파를 마녀사냥하려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북한 지배자들과 대북강경책을 써 온 이명박 정부 둘 다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야 한다. 계급적 관점이 중요할 때다. 따라서 투쟁을 중단·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굳건하게 옹호해야 한다.

전지윤

대북 강경책을 빌미로 현대차 파업 공격 말라 ▶ 1면에서 이어짐

통일연구원의 최진욱은 이렇게 지적했다. “이번 행동[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와 연평도 공격]은 계획된 것으로 북한 정부의 미국에 대한 당혹감이 갈수록 커진 결과입니다 ...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는 ‘여기 봐,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우릴 계속 무시할 순 없을 걸’ 하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책임도 있어선 안 된다. 이 정부는 전반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틀을 따르면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을 뿐 아니라 종종 호전적 발언을 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최근 천안함 사건 후 미국과 함께 북한 코앞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반복적으로 편 것도 그중 하나다. 불과 며칠 전에도 국방장관 김태영은 “미국에게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과 이명박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 지배자들에게 반동적 행동에 나설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육해공군이 힘을 합쳐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이명박의 발언, “몇 배, 몇십 배의 힘으로 적을 압도”하자는 이회창의 발언 등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번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상하긴 쉽지 않다. 북한 문제 전문가에 이단 포스터 카터는 미국 정부가 결국 북한과 협상을 시작해야 할 거라고 전망했다. “미국에게 좋은 대안이 없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비록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회담을 벌이겠지만 말이다. 회담 과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난할 것이고 판돈은 오히려 그전보다 더 클 것이다.”

과연 조만간 협상이 개시될 것인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적 공격을 감행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지적은 옳다.

미국이 다른 전쟁(특히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인 상황이 지속되는 한 전면 전갈이 판돈이 매우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한국 정부의 호전적 행동의 폭도 제한할 것이다. 지금 금융시장의 국외 투기꾼들이 패닉에 빠져 한국 시장에서 당장 돈을 빼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정세가 폭 낙관적일 것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와 우익들의 (과장 섞인) 호언장담은 북한뿐 아니라 국내 반대 세력을 노린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대포폰 파문 등 당면한 정치적 곤경을 덮어 버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같은 중요한 계급투쟁을 억누르는 데 이용하고 싶어 한다.

또 우려되는 것은 이명박과 오바마 정부가 교전 수칙을 바꾸고 초대형 항공모함을 포함하는 한미 합동 훈련을 펴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조처를 도입하

려 한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태 후 북한의 책임을 묻는답시고 반복적으로 대형 군사 훈련을 한 것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볼 때 이런 계획들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위협

게다가, 그런 호전적 활동은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일본 간 제국주의 경쟁과 맞물린다면 이 지역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예컨대, <뉴욕 타임스>는 11월 28일부터 열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미국이 “중국에게 말 듣지 않는 동맹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군사력을 중국 코앞에 배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국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자국 영토 근처에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훈련을 벌인 것을 잊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지배자들도 이번 사건을 자신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하려 들 수 있다. 예컨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일본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에 주변 사태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무시무시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간 갈등의 격화가 이 세계를 갈수록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지배자들의 군사 모험주의는 미국 제국주의 압박에 반동적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결코 지지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이른바 ‘국제 사회’의 위선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들의 제국주의적 대응에 반대해야 한다. 그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긴장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고조시킬 뿐이다.

진정한 대안은 이 지역의 평화를 짓밟고 있는 남북한 지배자들과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투쟁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당장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김용욱

전주·아산 공장으로 파업이 확대되고 있다

〈레프트21〉 특별취재팀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일주일 동안 부분 파업과 대체인력 저지 등으로 트럭 생산에 큰 타격을 줬고, 11월 22일에는 주간조 6시간, 야간조 전면 파업으로 트럭 2공장과 버스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웠다.

올해 초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연대 투쟁을 벌인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며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있다. 11월 19일에는 정규직 1천7백 명이 함께 잔업을 거부하기도 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 이동기 의장의 말이다.

“이번 투쟁은 파견법 철폐를 위해 매우 결정적인 투쟁입니다. 또한 타임오프제 등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서 확실히 반격을 하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이번 투쟁은 한마디로 자본가들의 정규직·비정규직 분열 전략에 맞선 투쟁입니다. 그래서 투쟁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중요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동안 정규직의 투쟁이 ‘대공장 이기주의’라고 공격받고 환영받지 못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위축되곤 했습니다.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정규직이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18명을 해고한 것에 반대해 윈·하청이 단결해서 싸웠을 때 ‘아름다운 연대’라는 찬사를 받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아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하고 있다. 잔업 거부에서 부분 파업, 전면 파업으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울산처럼 공장 점거가 시작될까 봐 사측 관리자와 용역 들은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송성훈 지회장을 납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의 폭력에 부상당한 아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입원을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는 투혼을 발휘하고 있다.

송성훈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사측의 탄압과 폭력이 자행되고 나면 노동조합 탈퇴서가 날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노동조합 가입서가 날아옵니다. 적어도 하루에 두세 명씩은 꼬박꼬박 가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청업체 반장도 가입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대체인력이 들어와도 잔업 거부를 조직할 수 있을 정도로 조합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기세라면 아산도 울산 공장 동지들 못지 않게 투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24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이 집회에는 울산만이 아니라 아산과 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거 참가했다.

파업 지원 운동이 전국에서 건설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11월 2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점거파업장에 구사대나 경찰력 투입 시 즉각 전면 파업,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2월 초 연대 파업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금속노조 대의원 압도 다수가 연대 투쟁과 파업에 찬성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힘겨운 투쟁을 하는 농성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결정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금속노조는 이를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울산 지역 20여 단체들은 이미 지난 9월 1일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진보정당, 학생회, 시민·사회 단체 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하며 매일 오전 출근 홍보전, 거리 홍보전, 공장 앞 집회와 농성으로 비정규직 노동

자 투쟁 지원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서울에서 동회으로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해 온 ‘간접고용철폐 공동농성단’은 동회으로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 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승리, 간접고용 철폐, 파견제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행동’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연대 움직임은 전주와 아산에서도 확산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11월 21일 ‘민주노동당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당원 1천여 명이 울산에 모여 파업에 힘을 보탰다. 진보신당도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11월 23일에는 민주노총이 제안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원을 위한 민중 제 단체 공동투쟁 상황실’이 만들어졌다. 진보·민중 단체들이 모두 참가하고 있고 매일 촛불집회 개최, 농성투쟁 지원, 지지 선언 운동 조직 등을 벌



연대파업을 결정한 11월 22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이기로 했다.

또, 12월 4일 ‘(가칭)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승리 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레프트21〉 지지자들의 파업 연대 건설 소식

〈레프트21〉 지지자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고려대·이화여대·연세대·명지대·성균관대·국민대·건국대·한국외국어대·한양대·경희대 등에 파업 지지 대자보를 부착했다.

11월 20일 울산에서 열린 민주노총 영남권노동자대회에는 〈레프트21〉 지지자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집회에서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이자 〈레프트21〉 독자인 정동석 동지가 “현대차(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의 연대 파업”을 호소해 커다란 박수를 받기도 했다.

11월 22일에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연대 파업을 호소하는 〈레프트21〉 호위를 반포했다.

또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단체가 지지 성명을 발표하도록 제안했다. 지금까지 건설노조, 쌍용차노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마포구지부,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한전 KDN노조, 세종호텔노조, 고려대 문과대 선본, 건국대 총학생회 선본 등이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주2회 서울 주요 거리에서 진행하는 〈레프트21〉 거리 판매 때도 시민들에게 파업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이 앞장서야 하는가

비정규직의 증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이 늘면서 정규직의 고용 불안감도 커져 왔다. 2005년 현대차 조합원 조사에서 82.4퍼센트가 ‘나도 언젠가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언제든지 정규직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기업주가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무기가 된다. ‘네가 일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일할 젊은 애들이 있다’며 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고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데 이용한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조의 힘도 약화시킨다. 그동안 민주노조들은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배부른 노동귀족’이라는 공격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른다. 더구나 파업 때 비정규직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 그 투쟁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무엇보다 위기가 닥치면 기업주는 먼저 잘 조직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을 공격하고 나서 정규직을 공격한다. 1998년에 현대차 사측은 먼저 비정규직 4천여 명을 공격했고 이어서 정규직 노동자 5천여 명을 해고하려 했다.

그래서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할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정규직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할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아니었으니까. 결국 그들이 나에게 퇴직 희망서를 보내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 줄 이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뭉치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울산 현대차 1공장에서 점거파업 중인 이용진 조합원은 투쟁이 자신을 크게 바꿔 놓았다고 말한다.

66 현대차에서 일한 지는 6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그냥 같은 일 하나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시 하청, 하청 정규직, 원청 정규직 등 많이 나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입사했어요. 그러다 몇 년 잘렸는데,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개월 하다가 자르고 그래요. 그래도 계속 일을 하니까 나름 운이 좋아서 저는 비정규직이 됐어요.

처음에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1년만 일하면 정규직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1년만 정말 열심히 일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해 봤더니 똑같아요. 변한 게 없죠.

6개월마다 계약서 쓰고, 언제 잘릴지



‘정규직화’ 열망으로 뜨거운 울산 1공장 점거 농성장

모르는 처지예요. 그래도 6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당장 하루아침에 잘리면 어떡하나 싶죠. 젊을 때라면 기술이라도 배울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길거리로 나왔으면...

노조에는 2005년에 가입했어요. 가입

하니까 사측이 저를 소개해 준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빨리 탈퇴시키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좀 살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3년 후에 탈퇴했다가 이번에 다시 가입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정말 돈이 곧 권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렇게 점거하고 투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립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2005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 형님들이 연대해 주시니까 희망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생각도 들고.

여기 와서 전태일 열사도 알게 됐어요. 전태일 열사 때문에 우리 나라 노동운동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투쟁도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잘 돼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더 연대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겠죠. 정규직 동지들의 동생, 아들, 조카도 어차피 비정규직으로 들어올 텐데, 그런 것 생각해서 연대에 좀더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허구한 날 관리자들이 시키는 것만 따랐지,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 목소리를 그나마 조금은 낼 수 있으니까 이미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차, KEC, 기흥전자와 같은 노동자 투쟁에 그전에는 ‘나 몰라라’ 했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안 했어요.

이렇게 투쟁하면서 정규직이 되면 그런 노동자들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승리해서 이 다짐을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1

정규직의 연대 투쟁과 파업이 관건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2010년 하반기 투쟁의 핵심이 됐다. 만약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기륭전자, 동희오토 승리에 자신감을 얻은 비정규직 투쟁에 더 큰 활력을 줄 것이고,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커다란 자극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투쟁이 승리하려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4만 5천 조합원의 막강한 힘과 투쟁의 전통을 가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나설 때 정몽구를 무릎 꿇릴 수 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이미 그러한 연대는 시작됐다. 울산 1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해 시위를 벌였고, 온몸으로 대체인력 투입을 막으며 관리자들과 대치했다.

많은 대의원·활동가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 방문하고, 연대를 결의했다. 이 아름다운 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무하고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뜨거운 열기는 다시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이런 아래로부터 현장 조합원들의 압력 덕분에 연대에 미온적이던 정규직 노조 이경훈 집행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음식물 등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현대차 사측은 1공장 잔업 축소나 휴업을 하고, 이 때문에 월급이 줄게 된 정규직이 비정규직 파업을 원망하게 만들려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는 온갖 거짓말로 가득한 유인물도 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은 더 단호하고 강력하게 정규직 연대 건설에 나서야 한다. 점거농성장 엄호뿐 아니라 대체인력 투입 저지에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원하청 공동 파업을 건설해야 한다. 당장 아반떼 같은 잘 나가는 신차의 생산 라인을 멈춰서 사측의 이유에 타격을 줘야 한다.

기아차 노조도 이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기아차는 같은 현대기아차 그룹 소속이며 정몽구라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고, 불법파견 비정규직이라는 같은 문제도 안고 있다. 더구나 현재 기아차 노조위원장도 ‘금속노동자의 힘’ 출신의 좌파 지도부다. 우파와 다른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 그 지도부를 지지한 많은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기아차 노조는 즉각 연대 파업에 나서야 한다. 잘 팔리는 K5 등 신차 생산 라인을 멈추는 투쟁을 건설해 현대차 사측에게 타격을 줘야 한다. 기아차 활동가들은 이런 투쟁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실

한국 경제와 수출의 핵심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만 멈춰도 한국 지배자들은 쪼쩍 땀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가 11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 파업과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이 계획을 반드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 특히 현대차지부는 이 계획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뚝들이지 말고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결의하고 울산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대규모 집회와 노동자대회를 계속 열어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지도부도 소속 노동자 당원들에게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 건설을 호소해야 한다. 얼마전 KBC 투쟁 때처럼 민주당과 손잡고 중재자 구실을 하며 점거를 해산시키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점에서 지난 21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에게 “정치권의 중재와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6당 공동대책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불길하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사무총장이 ‘노동자들의 요구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며 중재하겠다’고 한 것도 유감스럽다. 진보정당이 할 일은 중재가 아니라 연대 투쟁 건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2

이경훈 지부장은 비정규직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라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하겠다고 말했고 그 말을 일부 실행하기도 했다. 정규직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파업에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 여론도 높은 상황에 압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정규직 노조에 요구되고 기대되는 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후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독자적인 행동에 돌입”(〈현자치부소식〉14호)해 골치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사측이 폭력적으로 선제 공격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점거파업은 필요했다. 강패의 기습 공격에 맞선 사람에게, 나중에 와서 ‘왜 혼자 나서서 싸웠냐고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경훈 집행부는 “불법파견을 한방

에 해결하는 것은 무리다”, “앞으로만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여러분, 사안은 아직 사법부에서 진행 중이다” 등의 말을 해 파업에 초를 치고 있다. 이런 말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법원도 인정한 불법파견 정규직화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모든 힘을 집중해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다.

무엇보다 11월 22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이경훈 지부장이 연대 파업 계획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경훈 지부장은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의 연대 파업 결정을 두고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의사를 확인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것을 조합원들에게 다시 물어볼 이유는 없다. 2007년 한미FTA 반대 금속노조 파업 때도 현대차지부는 조합원 총투표를 하지 않고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던가.

정규직 활동가들이 구사대에게 두들겨 맞아가며 연대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집행부가 할 일은 아래로부터 연대 움직임을 받아 안고 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경훈 집행부는 비정규직 동지들이 일주일 넘게 찬 바닥에서 떨면서 자고 하루에 김밥 한 줄만 먹고 있는 상황부터 빨리 해결하라. 사측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중재하며 투쟁을 중단시킬 생각을 버리고 연대 투쟁 건설의 책임을 다하라.

연대 파업을 촉구하는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

이경훈 지부장이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의 연대 파업 결정을 조합원 투표에 부치겠다며 초를 치는 상황에서 정규직 대의원·현장위원들이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정규직 활동가들은 대의원·현장위원들에게 “이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화답해야 한다”면서 “연대 투쟁·연대 파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자”고 호소했다.

단 하루 만에 정규직 대의원 32명과 현장위원 7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그 수

는 확대되고 있다.

연서명을 조직하는 정동석 현장위원은 다음과 같이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워낙 정당성이 큰 투쟁이라 대체로 공감하면서 연서명에 참가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이경훈] 지부장이 총회를 밀어붙이지 않냐’며 대의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장조직’들도 모두 공개적으로 연대 파업 호소 글을 발표하고,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파업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퇴거요청서를 전달하려는 사측에 맞서 정규직 대의원들이 앞장서 스크럼을 짜고 있다.

기아차 노동자들도 연대에 나섰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단호한 점거파업이 15만 금속노조의 파업 결의를 이끌어 냈다. 이제는 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 연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자본가들이 비정규직의 파업을 깰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전술이 정규직과의 이간질이다. 이러한 술수가 먹히지 않으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폭력뿐이다.

하지만 이 폭력 역시 수천 수만 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공장에서 사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면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자칫 잘못하다간 정규직 조합원들의 거센 투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규직 활동가들이 연대 파업 건설에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기아차에서는 이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기아차지부 비정규직 분회는 11월

23일 주야 동시 잔업거부를 하고 조합원 1백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 11월 26일에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기아차지부 전체가 잔업거부를 할 것이다.

기아차 현장조직인 ‘금속노동자의 힘’은 “기아차 노동자들도 투쟁 대열에 합류해야” 하고 “투쟁의 불씨를 기아차로 옮겨 붙이자”며 연대 투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공장 ‘금속노동자의 힘’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가 선두에서 연대파업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현대 기아차의 전투적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속노조의 연대 파업 결정이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현대·기아차지부 노동자들의 어깨에 전체 노동자들의 희망과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을 다하자!

김우용 기아차 ‘금속노동자의 힘’ 화성공장 의장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경쟁력을 떨어뜨려 일자리를 줄인다?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많은 비용을 쓰면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회사가 흔들리면 정규직의 일자리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할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

현재 현대차에서 비정규직(2·3차 하청과 한시하청 포함)을 정규직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2천5백억 원이다.

그런데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2조 5천1백7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정몽구의 주식 자산 가치만 6조 원이 넘는다. 현대건설 인수에 쓰려고

한 돈도 5조 2천억 원이다. 이 돈들의 극히 일부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다.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경쟁력이 떨어져 회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몽구가 가져갈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몽구의 이런 욕심 때문에 현대차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 등에 신음하면서도 힘겹게 주야 맞교대로 일해 왔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노동강도를 낮추면 일자리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새로 나왔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연대 파업이 승리의 관건이다

레포트21 | 1,000원

폴라주 ④0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지금 현대차에는 정규직만 있습니다. 정규직인 노동자와 슬픈 정규직 노동자 이 두 정규직 노동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단호한 연대 투쟁만이 살 길입니다. 투쟁!



일투전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는가

요즘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지난 11월 16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이 주최한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민주당이 “진보 표를 잡겠다는 자기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KEC 점거 파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노조 간부들이 그를 크게 반겼다는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했다.

조국 교수도 “민주당은 정책 차원에서는 중도 보수 자유주의에서 한걸음 ‘좌클릭’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는가?

박 부대표가 예로 든 KEC 점거 파업에서 민주당이 한 일은 노동자들의 점거를 해제시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중요한 투쟁 무기를 내려놓게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중재자’를 자처하며 결국 사측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 파업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것이 전국적인, 전국 사내하청 문제와 대기업 제조업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직이나 아니냐의 범위를 넘어섰다.”(민주당 노동전문위원 조준화)

민감한 계급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지하기 쉽지 않다는 속내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의 점거파업을 지지하는 사회 여론이 커지자 그제서야 손학규는 “대법원의 판결(사내하청 불법 파견)은 그것이 사회적 추세이자 이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임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말 이상을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 당에게 연대 투쟁 호소는 기대도 않는다. 민주당이 어찌 감히 현대차 정몽구에 맞서 노동자 연대 투쟁을 호소하겠는가.

이 당은 하다 못해 말로라도 현대차 정몽구의 탐욕을 비난하지 못한다. 또, 점거 파업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식수 공급 문제에 민주당이 발벗고 나섰다는 얘기도 없다.

손학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당이라는 당명에서 ‘민주’자를 빼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총 김영훈 위원장을 만나서 한 말이다. 낯짝이 소가죽보다 더 두껍다.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의 반대를 무시하고 비정규직 악법을 통과시킨 당이 민주당이다. 장장 5년 2개월 동안 지속했던 기륭전자 비정규직 투쟁도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됐다.

이 당은 근본에서 노동계급에 적대적인 당이다.

지난해 말에 추미애가 한나라당과 야합해 노동법을 개악 처리한 것을 떠올려 보라. 민주당은 끝내 추미애를 징계하지 않았다.

입발림으로 노동자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 궁극으로 자본가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가 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친구 당이 아니라 자본가의 친구 당이다.

한미FTA

그러면 다른 문제들에서는 좀 다른가.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방침은 ‘MB식 재협상 반대, 전면 재검토’다. 한미FTA 폐기가 아니다.

한미FTA도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다. 허세욱 열사가 제 몸에 불을 사르면서, 수많은 노동자·학생 등이 물대포와 경찰 방패에 맞아가면서까지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한미FTA를 강행 추진했다.



KEC 점거 파업을 해제하러 가서 웃고 있는 손학규 진보진영이 ‘사채업자’ 민주당을 미화하는 한 노동자들은 계속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그런 민주당의 ‘MB식 재협상 반대’는 자기들이 협상한 한미FTA가 더 낫다는 소리로 들린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소심한 반발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공식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민주당은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지 않는다. 집권 시절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민주당은 기권했다. 직전에 진보정당들과 공동으로 파병 반대 결의안을 내놓기로 했다가 막판에 뒤통수를 때렸다.

민주당의 뒤통수 때리기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 4대강 예산 처리를 막겠다고 해놓고는 최종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절대 받을 수 없는 예산안이라고 방방 프다가 최종 순간에는 한나라당에 투항했다.

사실, 민주당은 언제나 무릎 꿇고 한나라당과 싸웠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한 박준영을 전남도지사 후보로 공천하고는 4대강 사업을 반

대한다고 말했다(박준영이 최근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말을 바꿨지만, 두고 볼 일이다).

조국 교수는 민주당이 “진보정당의 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흔히 말만 뽐튀기하고 실내용은 보잘것없다. 민주당 ‘좌클릭’의 상징처럼 돼 있는 ‘보편적 복지’가 정확히 그렇다.

사채업자

민주당은 강령을 개정해 ‘보편적 복지’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론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장원리를 우위에 두는 사회투자국가론의 기본 전제는 ‘투자’라는 말에서 보듯, 복지의 대상을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를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부르는 이유다.”(《진보정치》 493호)

정확한 지적이다. 정동영 등이 ‘보편적 복지’ 같은 용어를 부각하려 하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는 이를 부담스러워한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을 향해 ‘색깔’ 공세를 퍼기도 했다. 7·28 재보선 때 민주

당 광주지역 의원들은 민주노동당이 ‘대안 없는 반미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광주에서 민주당한테 ‘색깔’ 칼집을 맞고도 서울 은평을에서 민주당 후보 장상을 지지했다.

사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후보 양보를 끌어내는 조건으로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동지방정부 ‘실험’ 5개월 … 대부분 낙제점”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6가지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켜진 건 거의 없다. 민주당 구청장은 또 약속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다.”(《진보정치》 495호)

오죽하면 민주당과의 동맹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민주노동당조차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종종 냈다.

“민주당은 [SSM 관련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약속을 반복하고 한나라당과 분리처리 야합을 했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고 다시 동시처리 입장으로 돌아왔

다가 어제 다시 한나라당의 분리처리를 합의해 주어 중소상인들을 두 번 배신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 주었다.”(11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브리핑)

민주당의 배신, 조삼모사식 사기, 동요는 소수만 아는 비밀이 아니다. 대중적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두 달여 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반MB 정서가 사라질 까닭이 없는데도 7·28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미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좋아서’ 찍었다는 사람이 2.4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사람들은 카드 신용불량자가 사채업자에게 가는 심정으로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 사채업자에게 가는 사람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민주당 ‘좌클릭’ 운운은 사채업자를 미화하는 것이다. 대형 은행들 때문에 파산한 사람들의 삶을 사채업자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들에게 민주당과는 다른 정치적 대안을 제공해야 하는 임무가 진보세력에게 있다.

장호중·김인식

민주당 ‘좌클릭’론은 민주대연합 정당화 논리다

적잖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며 이를 민주대연합 논리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을 추진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가속됐다.

지난 8월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시사IN>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같이 가야 하는 파트너다” 하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민주당은 조금도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민주당에 친화적인 <한겨레>조차 “아직까진 말잔치”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포함해 민주대연합을 추진하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민주당의 ‘좌클릭’을 부풀리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에게는 야권연대를 위해 좌선화하라고 주문하고는 — 이를 위해 비판도 곁들이며 — 대중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좌선화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다고 포장해 주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의 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민주당의 ‘좌클릭’이 사이비라고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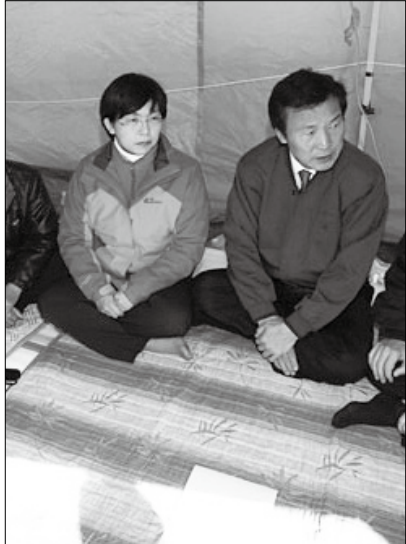
모순

“진보는 반신자유주의에 근거해야 하며 6·15로 표현되는 분단체제 극복, 자주평화통일의 비전이 담겨져야 하는데 민주당은 국민들 사이에 진보적 담론이 확산되자 여기에 편승해 ‘사이비 진보’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레디앙》, 9월 2일)

그러면서도 범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사이비 정당과 연합하겠다는 말인가? 이런 모순은 단지 말에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한미FTA에 대한 태도 문제를 두고 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 내 일부 지



현실은 민주당의 ‘좌클릭’이 아니라 진보정당들의 ‘우클릭’이다.

도자들은 민주당을 ‘견인’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태도를 ‘전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폐기’에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찬성할 만한 ‘전면 재협상’으로 후퇴하자는 것이었다.

다함께 등의 좌파적 반대에 부딪혀 이

런 시도는 무산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전면 재검토’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좌클릭’하기는커녕 되레 운동 내 일부 지도자들이 민주당 입장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지도부도 이런 문제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연합하자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정동영 등을 염두에 둔 듯하다.

진보신당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정책을 일부 수용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진보진영의 전통적 원칙에서 자신들이 후퇴해 놓고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대연합을 위해 민주당에 진보적 덧칠해 주기는 운동에 혼란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후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장호중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가 말한다

사회주의 정치가 일관된 연대를 가능케 했다

나는 1986년에 현대차에 입사한 후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때도 노조 건설에 주도적이지는 않았다.

1987년 당시, 나는 2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1공장 동료 수천 명이 몰려와 “민주노조 건설하자”, “임금을 인상하라” 하고 구호를 외쳤다. 나는 엄청난 힘에 놀랐고, 자연스레 그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려 스크럼을 짜고 공장 안을 휘젓고 다녔다. 그러자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결집했고, 회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우리는 2~3주 동안 이러한 행동을 지속했다.

그러나 사측은 불법이라며 우리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나와 동료들은 분노했고, 공장과 주변 일대에서 강력한 투쟁이 벌어졌다. 완전히 우리들의 해방구였다.

거대한 투쟁 때문에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무척이나 높았다. 1988년 현대차노조 이영복 위원장이 직권조인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조합원이 1만 명 이상 모여 집회를 하고 “왜 우리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며 위원장 목살을 잡고 항의하기도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겪은 후 나는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다 1990년에 현대중공업 굴리앗 투쟁이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경찰을 막으려고 울산 양정동 도로를 점거하고 싸웠다. 공장 안에서도 경찰력 투입에 반대하고 싸우자는 선동이 지속됐다.

그러나 당시 현대차노조 이상범 위원장은 투쟁이 공장 담벼락을 넘어 확대되니까 통제하려 했다. 결국 직권조인을 했고, 투쟁은 사그라졌다. 굴리앗 투쟁이 패배로 끝나면서, 나는 비로소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연대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1991년 5월에는 백골단 쇠파이프에



11월 22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연대파업을 호소하는 정동석 동지

맞아 강경대 열사가 숨졌다. 현대차 노동자들도 ‘백골단 해체,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회사가 토요일 휴무 결정을 내릴 정도였다. 공장 밖의 정치투쟁이 공장으로 들어와 노동자 투쟁과 결합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백골단

당시 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는 서울 소식이 무척 궁금했다. 그래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때 서울로 가서 대학생들에게 그 투쟁에 대해 물어 봤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자주파(NL) 학습 모임에 참가하던 나는 항상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컸다.

때마침 전야제 장소에서 ‘소련 · 중국 ·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대자보를 봤고 그런 주장을 하는 동지들과 밤새 토론을 했다.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가 사실은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덕분에 나는 북한 같은 억압적 사회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그 동지들과 노동조합 관료주의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1991년에 나는 현대차 대의원이었고, 별명이 ‘총파업’이었다. 주위에서 추천을 해 주 정의대책위원회에 참가했는데, 지도부가 맥없이 투쟁을 접어 버렸다. 그때 ‘노동조합 지도부는 현장 노동자들이 통제가 안 될 때는 투쟁을 자제시키는구나’ 하고 느꼈다. 서울에서 만났던 동지들이 말한 정치가 입증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노동조합 투쟁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사회주의 활동을 하게 됐고, 노동자들을 정치로 설득하고 행동으로 올바르게 입증하려 했다. 이런 활동 속에서 수배가 되고 구속되기도 했다.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사측은 정규직을 격정하는 것처럼 ‘비정규직 투쟁 때문에 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온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틈만 나면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고, 정규직 수천 명을 해고하던 자들이 위선을 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측은 사활적으로 이간질하는 것이다.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게 하려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사측의 논리에 맞서야 한다. 이런 흑색선전과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이기주의’, ‘노동 귀족’이라는 정부와 주류 언론의 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계급 분단을 숨기는 각종 논리를 명확히 반박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 문제를 회피하는 노동자주의나, 투쟁보다는 협상에 치우친 개혁주의의 정치는 한계가 많다.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투쟁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정치야말로 노동자들의 정치이고 투쟁의 길잡이다. 이런 정치가 나오 하여금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하게 만들었다.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구 하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자신감도 매우 높다. 투쟁이 정당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곳까지 왔고, 이제는 제발 비정규직이라는 옷을 벗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이번 투쟁의 목표는 ‘출입증’이 아닌 ‘사원증’을 다는 것이다. 이미 공장 안의 구호는 “우리는 이미 정규직이다. 정몽구가 나서라”다. 그들은 정규직화 외에 다른 타협은 하지 않을 태세였다.

이미진

수 없다. 이명박은 집권 초기에 <<통일은 없다>>라는 책을 쓴 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평양 점령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과 키리졸브 훈련 등 그동안 남한의 진보운동이 비판해 온 대북 호전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 지배계급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좌파 운동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원

야누스 장하준 그리고 좌파적 대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착취와 빈곤 확대에 불과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좌파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에 불고 있는 장하준 신드롬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의 책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하준 교수의 대안에는 분명 우리가 의심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

그는 제3세계의 빈곤과 저개발의 끔찍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합리적 주체”인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합리성은 시장이라는 무정부적 혼란에 질서를 부여할 것이라는 게다.

국가의 구실

그러나 과연 국가를 합리적 주체로 볼 수 있을까? 자본주의 국가는 착취와 지배를 기반으로 하는 현존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구실을 맡는다. 사회대다수를 차지하는 피지배계급에게 국가는 또 하나의 억압자이자 비합리적 주체다.

장하준의 야누스적 얼굴이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가령 그는 스탈린 치하의 강제집산화 정책과 프레오브라젠스키가 기획한 좌익반대파의 경제 강령을 동일한 것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스탈린의 강제적 공업화 정책은 오히려 바로 장하준

이 모범적 사례로 제시하는 한국 박정희 독재정권의 강제적 근대화 정책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장하준의 말대로, 스탈린의 경제개발정책을 통해 결과적으로 소련은 미국에 맞먹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지만 수많은 농민들은 끔찍한 빈곤과 아사로 내몰렸다.

마찬가지로, 박정희의 강압적 공업화 정책은 전대일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처참한 착취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경제개발의 성과는 결코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장하준은 경제개발을 위해 제3세계 정부들의 시장 개입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박정희의 사례를 모범적으로 줄곧 제시하지만, 오늘날 저개발 국가들에 필요한 것이 과연 박정희식 “위로부터 근대화”일까?

장하준의 편견과 달리, 소련 좌익반대파의 경제강령은 스탈린의 강제집산화 정책과 결코 동일하지 않다. 형식적으로는 양자 모두 농촌의 잉여가치를 도시로 이전해 산업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을지 모르겠으나, 좌익반대파의 주요한 목표는 그 내용상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재건과 이를 통해 당관료제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진정 필요한 것은 아래로부터 민주적인 통제와 계획이다.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결코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우리에게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까닭이다.

한상원

아시안게임을 시청하며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가 대항 경기를 시청(관람)하면서 자국 선수들이 승리하라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겼을 때 마치 자신이 이긴 양 기뻐한다. 스포츠 시청(관람)은 팍팍한 삶에 지친 노동자 · 서민들에게 청량제 같은 구실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직업화 · 엘리트화된 스포츠는 기업을 선전하는 도구, 지배자들의 정치적 선전 도구로 활용되기 일쑤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는 온갖 기업들의 광고가 쏟아진다. 기업들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은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박태환, 김연아, 박지성 등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은 정부의 정치 선전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본과 지배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스포츠는 더욱더 엘리트화돼 가고 있다. 즉,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스포츠’가 돼 가고 있다. 유도 국가대표 최민호 선수는 동메달(아시아 3등)을 딴 후 실망스런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최 선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는 좋은 성적을 내야만 기업의 후원을 받아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스포츠의 저변 확대(스포츠의 대중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스포츠가 직업 선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대중이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돼야 한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들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다. 이런 종목들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더 많이 짓고, 자치단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운동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적합한 종목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

스포츠 대중화를 위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절감돼야 한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과 더불어 무상체육도 필요하다.

동료들과 저녁식사 후 유도를 즐기고, 가족들과 주말에 사격을 즐기며, 겨울에는 체육관에서 컬링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정진덕

지난 호 기사를 읽고

44호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비판 기사는 민주노동당의 안이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안의 가장 위험한 부분인 선양보를 폐기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지지를 표했는데, 이는 옳다.

시민회의에 대해 추가 지적할 점은

시민회의가 단체 가입 없이 개인 가입만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굳이 조직된 부분을 배제하는 시민회의의 태도는 운동을 통해 개혁을 얻어낸다는 관점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상수

점거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한 2박 3일

나는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농성장에서 2박 3일 동안 함께 지냈다.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초코파이 하나와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차가운 바닥에서 이불 대신 비닐을 덮고 자고, 한 시간씩 기다려야 간신히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공장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보고 싶어 쉬는 시간마다 전화를 붙잡고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도 무엇이 그들을 버티게 하는가.

그들은 단지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얘기한다. “힘들어도, 슬퍼도, 아파도 눈물

을 흘릴 수 없다. 내 아이에게 비정규직 물려주지 않고 정규직으로堂堂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내가 3일 동안 1공장 안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투쟁가보다는 대중가요를 즐겨 부르던 20~30대의 젊은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바깥 소식이 들어오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토론한다. 지도부의 지시를 기다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의견을 밝히기도 한다.

한편 그들은 매우 규율 있다. 자신들이 맡은 구역에서 밤샘 보초를 서면서도 누

으로 운영되는 국가자본주의라는 것을 보여 준다.

북한의 행동은 현재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북한을 지지하는 남한 진보운동의 일부를 우익들이 마녀사냥할 빌미를 만들었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주의자라면 북한의 공격을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남한의 이명박이 잘했다고 볼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불바다가 되었다니, 정말 끔찍하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우리 피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난 예비군인데, 소집되는 건가?’ 하고 다들 걱정했다.

군복 입은 노동자 · 학생일뿐인 사병과 민간인들을 죽인 것은 북한이 ‘노동자의 자기해방’과는 무관한 가짜 사회주의라는 점을 보여 줬다. 이것은 북한이 착취와 경쟁 논리라는 자본주의 메커니즘



“비싼 집세가 우리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 아일랜드의 한 상점에 걸려 있는 항의 배너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아일랜드 은행 구제는 세계경제 위기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정부들의 긴축 계획이 체제를 안정화시킬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



“IMF/유럽연합의 구제금융 · 민영화, 삭감, 실업”

세계 경제 · 금융 위기가 이제 4년째 접어든다. 아일랜드 경제의 절망적 상태와 그로 말미암아 드러난 유로존의 긴장들은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에 일어난 예상치 못한 중요한 사태 전개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얹혀 있다. 세계경제의 불균형, 계속되는 은행 위기, 긴축정책의 영향이다. 세계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불균형은 채권국과 채무국 사이의 불균형이다. 중국과 독일은 최대 공산품 수출국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는 대개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일 수밖에 없다.

그 반대편에는 미국, 영국, 유로존의 더 허약한 나라들이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재화와 서비스 수입이 수출보다 많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려고 채권국에서 돈을 빌리게 된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경제가 지탱된 것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화와 자본이 유입된 덕분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점차 갈등에 휩싸였다. 미국이 수출을 늘리려고 달러화 평가절하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중국은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유럽에서는 채권국과 채무국 사이의 갈등이 주로 유로존 회원국 사이의 갈등이다. 불균형의 정도도 훨씬 더 심각한데 이는 유럽연합 경제의 발전소인 독일이 훨씬 더 작거나 취약한 국가들, 특히 그리스 · 포르투갈 · 남아일랜드 · 스페인과 갈등을 겪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1999년 유로화를 출범시킨 유럽경제 통화동맹의 프로젝트에는, 주로 프랑스 쪽의 기획이긴 하지만, 실제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대항마 구실을 하도록 하고, 둘째는 독일의 경제력을 통제하고 그 힘을 유럽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경제통화동맹은 내부 결함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유로화 사용국 사이의 상당한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으며, 지난 십여 년간 그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다.

독일 기업들은 자국 노동자를 희생시켜 경쟁력을 재편 · 제고하는 데 성공했다. 2000년대 내내 실질임금이 정제됐기 때문에,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독일은 세계 수출에서 9~10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다.

나머지 유로존 국가들에서는 실질임금이 상승했다. 이 때문에 나머지 유럽 회원국들은 독일보다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출 수 없었다.

한 국가 안에서는 지역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정부의 세입과 세출은 대개 부유한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자원을 이전한다. 그러나 유럽 경제통화동맹은 통화동맹에 지나지 않고, 게다가 독일의 고집 때문에 회원국은 금융 위기에 빠진다 해도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었다.

유로화가 출범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이런 문제는 금융 시장에서 잊혀졌다. 유로존의 취약한 회원국들은 독일의 차입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렇게 신용을 십사리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일랜드와 남부 유럽에서는 자산 투자와 소비 지출이 급증했다. 그 뒤 2007~2008년에 호황이 불황으로 치달

자 각국 정부들은 대불황이 1930년대 규모의 불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입과 지출을 크게 늘렸다.

위험스러운

공공 · 민간 부채의 증가가 특히 위험스러웠던 것은 2008년 가을에 1914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금융 위기를 촉발한 은행 위기가 함께 닥쳤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유럽의 은행들은 미국과 유럽 지역들에서 일어난 주택 시장의 거대한 투기 거품을 부풀리려고 대규모로 차입을 했다.

미국을 제외하면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아일랜드였다. 자산 거품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국민소득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은행들이 미국의 신용파생상품을 사들이고 남부 유럽 정부들에 대출하는 데 열을 올렸다.

2008년 가을에 시작된 정부 구제금융의 의도는 이 은행들을 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IMF가 최근에 발표한 금융 안정성보고서는 2007~2010년 은행 손실이 2조 2천억 달러에 이를다고 추정한다. 처음의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규모다.

보고서는 버블 기간에 은행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향후 2년간 4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최근의 유로존 위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은행들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4월과 5월에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리스 국채의 금리가 상승했다.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로존은 부분적으로 “전염”이 두려워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달리 말해, 신뢰의 위기가 그리스에서부터 번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이 그리스 · 포르투갈 · 스페인에 너무 많이 대출했기 때문에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과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5월에 유럽연합이 4천4백억 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용자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두 번째 은행 구제금융이었다. 메르켈이 사르코지와 버락 오바마의 압력에 못 이겨 마지막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당시 독일 정부는 회원국 정부의 과다 지출과 차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유럽연합 조약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었다.

독일의 강경한 태도는 국내의 정치적 압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독일 수출이 크게 회복된 것에서 비롯한 자신감도 있었다. 특히 고급 공산품의 수요가 중국에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다. 독일과 또 다른 유로존 선두 국가인 프랑스의 격차도 커지는 상황이다.

독일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유로존 내부 갈등이 커진다. 그리고 조약을 개정해서 대부자도 미래 구제금융의 비용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메르켈이 경고하자 시장은 경악했다.

당장의 희생자는 아일랜드였다. 2008년 10월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은행 부채의 대부분을 지금 보증하기로 했다. 이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논평한 대로 “금융 시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와 은행을 하나의 통일체로 변화시킨 조치”였다.

그러나 아일랜드 은행들이 파산장경에 몰려 유럽중앙은행의 대출로 연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난 몇 주 동안 상황이 분명해지자, 아일랜드에서는 기업 예금이 급격히 이탈하기 시작하고 국제 금리가 치솟아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주 말 아일랜드 정부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뻔뻔하게 말한 “IMF, 유럽중앙은행, 유럽집행위원회 상투 체제가 그리스를 보호형 비슷하게 만들어 버린 조건”을 수용했다.

곤경

그러나 이런 조치가 “전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자산 시장 거품의 희생자이자 그리스나 아일랜드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큰 스페인이 금융 시장에서 불신을 받는다면 유로존은 정말이지 심각한 곤경에 처할 것이다.

셋째 불안정 요소는 유럽을 휩쓴 긴축정책이다. 이 조치는 원리상 공공 지출을 감축시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긴축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조짐만 보일 뿐이다.

그리스 정부는 얼마 전 공공 재정을 더욱 감축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재정 적자가 유럽연합과 IMF의 “구제” 조건인 국민소득의 8퍼센트 수준을 웃돌아 9.4퍼센트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목표치를 웃돈 이유는 경제가 예상보다 4.2퍼센트나 더 위축했기 때문이다. 긴축 정책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감소시켜 경제 총생산량을 줄이고 정부 차입의 부담을 더 늘린다.

심각한 경기 침체와 혹독한 삭감에도 불구하고 IMF의 아일랜드 보고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일랜드의 높은 물가 · 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처방으로 앞으로 수년간 수출 증가를 위한 ‘국내’의 평가절하[임금 삭감 같은 내압] 시기가 필요하다.”

긴축의 폐해를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랍시고 신자유주의 컨센서스가 유령하게 제시하는 것은 그저 더 많은 긴축뿐이다. 더 나은 미래는 신자유주의의 지배를 분쇄할 사회 · 정치적인 대규모 투쟁에 달려 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천형석



포르투갈 노동자 75퍼센트가 총파업에 참가하다

11월 24일 포르투갈 노동자들은 사회당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파업은 1988년 이후 최초의 총파업으로, 포르투갈노동총동맹(CGT)은 전체 노동자 중 75퍼센트가 파업에 참가해 역대 최대 총파업이라고 발표했다. 지하철을 포함해 공공교통은 거의 완벽하게 운행이 중단됐다. 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기업 노동자들도 대거 파업에 동참해 포르투 지역의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노동자의 90퍼센트가 출근하지 않았다.

아일랜드 노동자들은 은행 구제 비용을 치르지 말아야 한다

정치 · 경제 위기가 아일랜드를 휩쓸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몇몇 나라도 함께 빨아들여야 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IMF는 이번 주[11월 23일]에 수백억 유로 규모의 은행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여기에 70억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대량 실업과 이민이 겹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가난과 불평등도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중 아일랜드 민중에게 가는 돈은 한 톨도 없다. 모든 것이 아일랜드 경제와 동반 몰락할 판인 은행가들을 살리기 위한 돈이다.

이미 몇 년간의 긴축으로 고통받아 온 빈민과 취약 계층은 은행 구제 비용을 대기 위해 더욱 큰 고통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번 주말에 대규모 시위가 계획된 것도 그 때문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파멸적 위기에 빠져 있다. 집권당인 피아나 페일은 12월 7일에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착수하고 있지만 그들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집권당의 영정 파트너인 녹색당은 굴종적이기도 긴축 예산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소장파 의원들의 마음이 바뀌면 연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분노와 환멸을 느끼고 있다.

더블린의 묘사인 캐터린 무니는 이렇게 말했다. “의회는 말만 많지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IMF 구제금융은 노동자들에 맞선 기나긴 전쟁에서 또 한번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호황 시절에 ‘파트너십’을 명분으로 저들에게 다 내줬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긴축 하면서 또 내줬는데 이제 그들은 은행들을 위해 노동자를 더욱 쥐어짜려 합니다.”

은행가들

연금 생활자인 피터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제 연금의 10퍼센트를 떼서 은행가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기꾼들이고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기꾼 집단이 자기를 주머니를 채우면서 우리더러 그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공공 의료

서비스가 후퇴할 것이고, 아이들과 노약자와 장애인에 보장받지 않은 공공 서비스 혜택마저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 은행들에게 갚아야 할 1천억 파운드와 영국 은행들에게 갚아야 할 1천 90억 파운드는 확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일랜드 은행들은 6개월 동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대량 실업과 이민이 겹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가난과 불평등도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중 아일랜드 민중에게 가는 돈은 한 톨도 없다. 모든 것이 아일랜드 경제와 동반 몰락할 판인 은행가들을 살리기 위한 돈이다.

이미 몇 년간의 긴축으로 고통받아 온 빈민과 취약 계층은 은행 구제 비용을 대기 위해 더욱 큰 고통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번 주말에 대규모 시위가 계획된 것도 그 때문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파멸적 위기에 빠져 있다. 집권당인 피아나 페일은 12월 7일에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착수하고 있지만 그들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집권당의 영정 파트너인 녹색당은 굴종적이기도 긴축 예산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소장파 의원들의 마음이 바뀌면 연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분노와 환멸을 느끼고 있다.

더블린의 묘사인 캐터린 무니는 이렇게 말했다. “의회는 말만 많지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IMF 구제금융은 노동자들에 맞선 기나긴 전쟁에서 또 한번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호황 시절에 ‘파트너십’을 명분으로 저들에게 다 내줬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긴축 하면서 또 내줬는데 이제 그들은 은행들을 위해 노동자를 더욱 쥐어짜려 합니다.”

이들은 호황 시절에 “파트너십”을 명분으로 저들에게 다 내줬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긴축 하면서 또 내줬는데 이제 그들은 은행들을 위해 노동자를 더욱 쥐어짜려 합니다.”

그러나 이 중 아일랜드 민중에게 가는 돈은 한 톨도 없다. 모든 것이 아일랜드 경제와 동반 몰락할 판인 은행가들을 살리기 위한 돈이다.

이미 몇 년간의 긴축으로 고통받아 온 빈민과 취약 계층은 은행 구제 비용을 대기 위해 더욱 큰 고통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번 주말에 대규모 시위가 계획된 것도 그 때문이다.

프럽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성난 반응을 보입니다.

“저들은 시장 탕을 합니다. 은행들이 정부에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신뢰를 흔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일랜드 민중을 바보 취급했으며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싼 자동차도, 말도 안 되는 판공비도 다 반납해야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 난장판을 해결하는 데 누가 적임자인지는 민중이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노조 활동가들도 이런 분노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의 다른 세력들은 더 보수적이다.

희생

너무 오랫동안 노조들은 “국익”을 위해 희생을 받아들이고 파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 왔다.

그러나 국익이라는 말은 결국 호황기에 이득을 독차지하고서는 이제 와서 노동자들에게 뒤처리를 떠넘기는 최상위 부자들의 이익을 뜻할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의 4개년 계획에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 비용을 낮추는” 조처도 포함된다.

이는 곧 법인세를 낮추는 것을 뜻한다. 이와 동시에 공공부문 일자리 2만 8천개를 없애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봉급을 삭감하려는 계획도 마련돼 있다.

아일랜드 정부의 계획은 2014년까지 빈민 10만 명이 이긴 것은 전제로 하고 있다.

실업자인 존은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이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캐나다를 생각하고 있죠.”

“건설 쪽에서 일해 온 사람들을 모두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일자리가 도대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는 심지어 더 없어요.”

유나이티드 노조의 지역 대표인 지미 켈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대 청소’입니다.”

“우리 정부는 2년 동안의 무능과 거짓말 끝에 마침내 통치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인사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종 행사를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실적이 부

한편 주요 야당들은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도 공공직을 삭감하는 동의한다.

그러나 대중의 환멸과 분노는 긴축을 막아내는 운동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도 정부와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가 매일 열리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고비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27일] 아일랜드노총이 주최하는 대규모 시위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권’ 캠페인이 주최하는 대중 시위가 12월 7일 화요일 예산 타격일에 계획돼 있다.

이런 시위는 더 강력한 행동으로 가는 다짐들이 돼야 한다.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부자들의 이 강도짓을 멈출 수 있다.

위기의 다음 번 제물이 될 수 있는 포르투갈 노동자들도 이번 주에 총파업을 할 계획이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저항이 필요하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천형석

레프트21을 정기구독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레프트21에서 전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

정기구독료(우편료 포함): 1년(26개 호) 5만 원 | 2년(52개 호) 10만 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36-0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98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번역 천형석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가 11월 1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이명박 규탄,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국가인권위를 ‘인권유린위’로 만드는 이명박 정부

‘MB의 꼭두각시 현병철을 몰아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자’는 요구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월 11일 6백60개 인권사회단체들이 현병철 위원장 즉각 퇴진,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뒤이어 전국 열 곳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법학교수, 변호사, 여성, 장애인 단체도 가세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41명이 현병철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현병철의 독단적 운영에 반대하며 조국 비상임인권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 11월 16일에는 인권위 위촉을 받은 전문, 자문, 상담위원 1백60여 명 가운데 67명이 동반 사퇴했다.

그러나 사태의 진원지인 현병철은 뻔뻔스럽게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다.

조중동은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 사태를 ‘인적구성을 둘러싼 이념 대결’로 규정하면서 현병철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사퇴한 상임위원들의 후임으로 김영혜 변호사와

뉴라이트인 홍진표를 임명했다. 이들은 인권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다.

김영혜는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던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의 헌법소원 대리인이었다.

홍진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고, 지난해에는 2008년 촛불항쟁을 왜곡·궤변하기 위해 《거짓과 광기의 100일》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2백23개 단체로 구성된 ‘현병철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는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를 철저히 정권의 정치도구화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11월 1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현병철 사퇴운동의 전국적 물결’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를 돌려 달라!’는 요구는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처절하게 인권을 유린당해 온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바람이다. 그것마저 빼앗아 기득권 세력의 입에 털어 넣으려는 이명박 정부는 ‘인권의 적’이다.

이광렬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

진보 선본이 선전하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빙애플’ 선본이 7표 차로 아쉽게 낙선했다(544표). ‘무빙애플’ 선본의 성지현 후보는 올해 진보 성향의 이화여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좌파 활동가고, 권유경 후보도 한국여성민우회 같은 진보적인 여성단체와 봉사 동아리 등에서 활동해 왔다.

사과대에서 진보 선본이 출마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없던 일이다. 그런데 후보들이 진보적 공약을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하자 25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선본에 참가했다.

‘무빙애플’은 사회운동에 연대하는 학생회, 교수 확충, 등록금 인하, 경쟁 심화 반대, G20 반대 행동 등 상대선본(‘꽃사과’)과 차별되는 공약을 내세웠다. 선본 차원에서 G20 항의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두 선본 사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형강의 해결 방식과 학생회의 사회운동 참여 문제였다.

학교 측은 사과대 경제학과에 콩나물 강의실이 늘어나자 학생들이 경제학과로 전과할 수 있는 학점제한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꽃사과’ 선본은 이를 지지했다.

‘무빙애플’ 선본은 학생들이 자유

롭게 전과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아 학생들을 분열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교수 충원과 강의 확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의 진보적 사회운동 참여 문제도 논쟁이 됐다. 하지만 “사회는 시끄러운데 사회대 학생회는 조용”했다는 ‘무빙애플’의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많았다.

‘꽃사과’ 선본이 지난 5년 동안 사과대 학생회를 운영했고 학내 복지 개선 요구 집회에 학생들을 많이 조직하는 등 학생회를 무난하게 운영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빙애플’이 7표 차로 낙선했다는 것은 진보적 주장이 꽤 지지를 얻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성지현 후보가 학내 미화노동자 투쟁 조직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부각하지 않은 점과 선본 이름이 진보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해 이름만으로 두 선본을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만약 이런 점이 보완됐다면 진보적 학생들의 표 결집력이 더 높아져 7표 차를 뛰어넘었을 수도 있었을 성 싶다.

‘무빙애플’로 의기투합한 학생들이 선거 이후에도 진보적 운동을 건설하면서 착실하게 기반을 쌓아가길 바란다.

최미진

전교조 지도부 선거에 범죄파 후보가 출마하다

전교조 지도부 선거가 시작됐다. 범죄파와 온건 개혁파가 경합하는 이번 선거에선 ‘투쟁을 강화할 것인가, 진보교육감·민주당 등과의 사회적 협의를 강화할 것인가’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범죄파 진영은 진영호 위원장 후보를 비롯해 전국의 11개 지부 선거에 출마했다.

진영호 전교조 위원장 후보(기호 1번) 인터뷰

“아래로부터 불만을 모아 투쟁하겠습니다”



전교조 위원장 후보 진영호

“[전교조의 위기가] 권력의 탄압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문제는 싸워야겠다는 의지보다 겁을 먹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위기가 더 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문제가 잘못되고 있는데, 지도부가 전국적 싸움을 벌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도부가 [개정 교육과정,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일반 조합원들이 당하는 문제에 눈 감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싸워 주지 않는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명박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들의 탄압은 말도 안되죠. 교사의 정치적 자유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갖고 싸우느냐입니다. 일제고사, 입시경쟁, 학벌주의는 교육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 싸울 때 전교조는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박수받을 수 있어요.

실현 가능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하자니까 너무 원칙론적이고, 그게 실현 가능하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볼까요?

2007년에 정동영의 교육 공약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였어요. 그게 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걸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정동영에게 그 요구가 너무 원칙론적이라고 비판할 겁니까?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무상급식 운동 10년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조그만 성과에 만족하면 사업하기 편하죠. 그러나 적어도 전교조는 교육문제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불행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교육으로부터의 소외가 교사와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경쟁만 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을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정치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문제의 원인을 따져가다 보니까 그게 정치적 권력의 변화와 맞물리지 않을 수 없어 불가피한 겁니다. 안 그러면 교육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전교조는 전국 조직입니다. 지도부가 진정 대중에게 제시해야 할 것은 전국적 전망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입니다.

자기 전망 없이 [민주당과 협력하는] 민주당 연합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공조도 자기 것이 있고 난 뒤에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사들이 다시 모여야 하고, 아래로부터 불만과 요구가 모여야 해요. 대중운동이 뒷받침되고 그 힘으로 [진보]교육감을 견제하지 않는 한, 보수 교육관료들 속에서 [진보]교육감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보]교육감과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진보]교육감이 흔들릴 때 비판하고 견제해야죠.

대학 서열화의 시스템을 바꾸고, 학벌이라는 신분제도에 맞서야 합니다.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함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을 때 대중이 움직일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박설

이영주 전교조 서울지부장 후보(기호 1번) 인터뷰

“투쟁 없이는 공교육을 못 지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인간적인 삶을 살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미래를 꿈꾸고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합니다. 민주적이어야 하고 물이 통하는 곳이 학교여야 하는데, 학교 안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소한 공공기관에는 비정규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교조가 연대해야 하고요.

곽노현 교육감도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교육감이 돼야 하죠.

[일부에선] 네이스 반대 투쟁과 교원평가 반대 투쟁이 노무현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일을 진보교육감에게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비판받아마땅했습니다. 노무현의 가장 큰 실책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잃어버린 것,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공격

교육 서열화, 학생 서열화, 학교 서열화, 일제고사, 교원평가 같은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맞서 투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4대강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전교조도 투쟁해야 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고, 전교조는 미

래를 만듭니다. 이것은 정부, 자본가, 조중동들에게는 두려운 일일 겁니다. 이것이 전교조에 공격을 퍼붓는 이유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교조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전교조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투쟁 방법을 바꾸자는 말이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시국선언, 일제고사 반대 투쟁 등 전교조가 투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교조를 지지해 줬습니다. 전교조는 노동자들이 원하는 교육,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투쟁을 할 때 [더 넓은 층의] 노동자들에게 지지 받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2007년에 본부 [집행부]는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사업으로 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논쟁 끝에 대의원대회에서 사업으로 채택했지만, 투쟁을 진지하게 조직하지 않았죠.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몇개 지부들과 힘을 합쳐 일제고사 반대투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교육과 시험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교원평가 폐지 투쟁도 10년이 다 돼 갑니다. 처음엔 교사들의 권익만 위해 싸우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아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교사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단체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본부가 강력한 투쟁을 벌이면 교원평가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위원장이 당선해야 하는 것이죠.”

인터뷰·정리 김인숙

범좌파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조 15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위원장 선거와 7곳의 지부장 선거(14대 선거보다 세 배 이상)가 경선이다.

이번 선거는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일정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치러진다. 여러 후보들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드러내며 진보교육감 시대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후보들은 ‘위기’를 말하고 있다. 정부의 집중 탄압 속에서 전교조 활동이 위축되고 지회·분회 조직이 약화되고 조합원 수도 줄었다. 체제의 경쟁법칙에 종속된 교육제도에 도전하는 만만찮은 과제 속에서 적잖은 경험 있는 활동가들이 지치고 자신감을 잃기도 했다.

그래서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형성된 기대는 곧장 투쟁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참예

이런 모순적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에서도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첨예하다.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진영효-박옥주 후보 등 범좌파 진영(이영주 서울지부장 후보를 비롯해 전국 11곳의 지부 임원선거에 출마)은 진보교육감이 당선하고 정부의 위기가 심각한 지금이 “투쟁성을 회복할 기회”라며 교원평가, 교육과정, 일제교사 등에 맞선 저항을 강조한다.

반대로, 기호 2번 장석웅-박미자 후보는 매우 온건한 개혁주의를 표방한다. 진보교육감 등과 협의 가능한 수준의 개혁을 위해 투쟁과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석웅 선본은 “너무 정치적이고 과격”한 “대정부 강경 투쟁”이 전교조를 고립시켰다며, 혁신학교, 교육복지 확대 등 “실현 가능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정부 정치투쟁이 전교조를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것은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넓히고] 진보교육감의 출범을 가능하게”(진영효 선본) 했다.

실제로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진행된 일제교사·경쟁교육 반대 투쟁, 시국선언 등은 대중적 교육개혁 열망과 전교조에 대한 지지를 확대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명분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교원 구조조정과 경쟁교육을 강화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라도, 혁신학교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 서라도 정부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진영효 후보는 이렇게 말한다. “아쉽게도 정진후 지도부는 중요한 현안 투쟁을 개인 교사들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이것은 [교사들의] 기를 꺾어 왔습니다. 새



2010년 5월 16일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전교조 조합원들의 교육개혁 열망을 모아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지도부는 정부에 도전해 전국적 투쟁을 주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중요한 쟁점은 진보교육감을 대하는 태도다.

장석웅 선본은 운동 건설보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를 강조한다. 이 선본을 구성한 ‘현장모임연석회’는 〈진보교육시대〉창간호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네이스 투쟁, 교원평가 투쟁으로 노무현 정부와 4년간 적대적 관계 속에서 보내는 우를 범했다. … 진보교육감 벨트 형성은 중요한 기회다. 이 기회를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처럼 만들어서 다시 공멸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장석웅 선본이 신자유주의의 교육 정책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교원권리 주장

이 “이기적”이라며, ‘사회적 협의’를 위해 운동의 요구를 낮추자는 데 있다. 예컨대, 장석웅 선본은 ‘교원평가 폐지’ 요구가 “부차적”이며, 이것을 고집하면 민주·진보진영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

진보교육감

그러나 이런 태도는 더 큰 단결은커녕, 오히려 우리 내부의 분열만 낳고 투쟁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정진후 현 집행부가 교원평가 반대 투쟁 전선에서 후퇴해 민주당 등과 함께하는 ‘6자 협의체’ 참여를 제안한 것이 내분과 혼란을 야기하고 운동의 동력을 약화시켰던 것처럼 말이다.

게다가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정부와 보수 언론의 압력에 직면해 정부 정책에 도전하길 주저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추수하면, 조합원들의 수동

성과 낙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진영효 선본이 제시한 것처럼, 진보교육감과 ‘협력과 견제’를 통해 투쟁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 옳다. 진보교육감이 정부 정책에 맞설 때 그를 지지해 함께 싸우고, 동요하는 행보를 할 때 비판과 독립적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열린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길이고,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북돋으며 투쟁을 확대·강화하는 길이다.

한편, 진영효 선본이 교육개혁을 위한 대정부 정치투쟁을 강조하면서도, 진보 정당 후원, 시국선언 등 교육영역을 넘어선 ‘정치 활동 자유’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 그동안 더 넓은 정치운동과의 결합이 전교조의 운동을 강화시켜 온 데다, 정부가 그것을 표적 삼아 탄압하고 있어 더 그렇다.

그럼에도 진영효 선본 등이 좌파적

주장과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부문 공격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교사들은 범좌파 후보들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좌파 지도부 당선이 기존 노동자들의 투쟁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의 경쟁교육에 맞서 더 강력히 싸우자는 목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확대돼 온 광범한 교육개혁 열망 덕분에 교사들도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정부의 으름장 속에서도 교사 3만 5천여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은 커져이 쌓여가는 분노와 정부의 정치 위기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좌파 활동가들은 내내심을 갖고 정부에 맞서며, 기층에서 투쟁의 정당성과 정치적 확신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박설

민주당은 교육개혁의 동맹이 될 수 없다



2007년 4월 30일 사학법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장석웅 선본은 “민주·진보 연대”를 강조하며 선거를 통해 진보적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과 협력하는 민주연합이 MB식 교육정책에 맞설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육개혁의 동맹이기는커녕, 번번이 개혁 약속을 배신하며 운동진영의 뒤통수를 쳐 왔다.

이명박 정부의 ‘미친교육’ 정책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것들이다. 교원평가,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

한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정부였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교원평가 반대 투쟁을 한 전교조 활동가 2천1백13명에게 경고·주의 등을 주고, 4백36명을 중징계하며 탄압했다.

열린우리당은 2007년에도 한나라당과 아합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상정 2분 만에 사학법 개약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다수당일 때 비리재단이 줄줄이 부귀할 길을 터 준 것이다.

최근에도 전라북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교사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

라”며 김승환 진보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런 민주당에 부질없는 환상을 부추기고 그 당과의 연대에 매달리는 것은 투쟁 동력을 약화시켜 이명박의 교육 부문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게 만든다.

지난해 말에도 전교조 지도부가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교원평가 6자 협의체’에 참가해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교원평가가 시행됐다.

‘물지마 반MB 연대’가 아니라, 진보진영의 단결과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정선영



2010년 5월 전교조 집회에서 교사들과 대화하는 광노현

광노현 교육감의 두 길 보기

최근 전교조 강동송파지회가 진행한 ‘광노현 교육감과의 대화’는 전교조가 진보교육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고민케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합원 1백50여 명이 참가해 현장 교사들의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반영했다. 두 시간 반 넘게 쉽없이 진행된 모임에서 조합원들은 수많은 질의와 제안을 쏟아냈다. 여러 교사들이 교장 중심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기했고, 경쟁과 소의로 얼룩진 학교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광노현 교육감은 앞으로 전교조와 적극적으로 정책을 협의하겠다고 했고, 혁신학교의 성공을 다짐했다.

그러나 광노현 교육감은 유감스럽게도 정부 정책에 정면 도전해야 할 중요한 과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광 교육감은 경쟁을 강화하는 자사고

지정을 두고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고, 일제교사 해직교사들의 복직은 ‘전례가 없고 실정법을 교육감이 뛰어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마냥 진보교육감에 기대거나 두둔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인상적으로 정부에 맞서 왔지만, 다른 한편에서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경쟁을 강요하고 학교를 병들게 하는 교과부와

MB식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진보교육을 실현하려면 정부의 진보교육감 탄압에 맞서 그를 방어하면서도, 필요할 때 진보교육감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자 구실을 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개혁의 진정한 동력인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김연오 전교조 조합원

인민전선의 역사는 계급 협력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편집자 주] 지금 대다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대연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노동계급과 자본가 자유주의 세력의 체계적인 계급 협력을 가리키는 인민전선의 한국판이다.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인민전선은 모두 비극적이거나 우울한 결말을 맞이했다. <레프트21>은 이번 호부터 인민전선의 주요 사례들(프랑스, 스페인, 미국, 칠레, 중국, 해방 정국의 조선)을 살펴보는 연재를 시작한다. 첫 연재에서는 인민전선에 관한 개괄적 이해를 돕고자 인민전선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다.

인민전선 정책은 1935년 7~8월 코민테른(국제공산당) 7차 대회에서 처음 채택됐다.

그 직전까지 스탈린의 코민테른은 ‘사회파시즘’론을 채택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사회민주주의와 파시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라고 말했다.

스탈린은 둘의 계급적 토대가 다르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사회민주주의의 계급적 토대가 노동계급 조직이라면 파시즘은 중간계급, 미조직 노동계급 부문, 룬페이 그 기반이었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와 파시즘은 갈의 양날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지행하는 상호배타적 버팀목들이었다.

‘사회파시즘’론은 독일에서 재앙을 낳았다. 독일공산당과 독일사회민주당은 변변한 투쟁 한번 못해 보고 1933년에 히틀러에게 권력을 내 줬다.

이 점에서 인민전선은 ‘사회파시즘’론이라는 백치병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그러나 트로츠키가 지적했듯이, “모험주의적 좌익주의가 우익 중도주의 유형의 노골적 기회주의”로 변신한 것이었다. “뜨거운 우유에 덴 고양이는 찬물도 피하는 법이다.”

인민전선은 계급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면 파시즘의 악몽을 끝낼 수 있다는 정책이다. 실천에서 이것은 노동계급과 자유주의 자본가의 체계적인 계급 협력을 뜻했다.

과거에 사회민주당들의 민족주의적·계급협력주의적 정책에 반대해 그들과 결별했던 코민테른이 이제 사회민주주의의 세력보다 더 노골적인 계급 협력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것은 코민테른의 기본 테제를 근본에서 부정한 것이었다. 레닌 등이 작성한 코민테른 가입 조건(21개 조항)에는 공산당과 자본가 정당의 연합 반대가 포함돼 있었다.

일국 사회주의

인민전선은 1935년에 채택됐지만, 그 기원은 1924년에 발표된 일국 사회주의론이었다.

일국 사회주의는 혁명 방위의 성패를 국제 계급투쟁이 아니라 소련 한 나라의 힘에 건다는 뜻이었다. 한 나라 안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면 국제 혁명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덩 같은 것이 된다.

일국 사회주의론은 각국 공산당이 민족주의로 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그 결과 “각국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노선에 따른 코민테른 붕괴의 시발점”(트로츠키)이 됐다.

이 정책에 따라 각국 공산당들은 소련의 ‘국경수비대’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소련에 군사적 개입을 못 하도록 막는 방패 구실이 공산당의 주요 임무가 됐다.

그러자면 공산당들이 잠재적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혁명 활동의 수위를 낮추고 자국 자본가들에게 개혁주의적 압력이나 행사해야 했다. 이 정책은 중국 혁명 등에 치명타를 가했다. 1920년대 중엽 중국공산당은 이른바 ‘진보적’ 부르주아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에 굴종했고, 1925~27년 중국 혁명은 분쇄됐다.

인민전선도 소련의 대외 목표와 관계 있었다. 히틀러에 반대해 소련과 군사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 정부들에 압력을 넣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히틀러의 군비 증강 시도가 겨는 목표물 중 하나가 소련이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영국·프랑스와 군사 동맹



1971년 9월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에 저항하는 칠레 대통령 아옌데(맨 왼쪽) 칠레 인민전선은 비극적 결말로 끝났다.

을 맺고자 안달했다. 마침내 1935년에 스탈린은 프랑스의 중도 우파 라발 정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스탈린은 이 관계를 공고히 하려면 공산당이 ‘자유주의적’ 자본가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그것만이 파시즘의 진격을 막을 유일한 ‘현실적’ 방도라고 봤다(그 핵심 논지는 40년 전에 베른슈타인 등이 설파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물론 레닌 시대의 소비에트 정부도 자본가 정부들과 조약들을 맺었다 —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1920년 에스토니아와의 조약, 1920년 10월 폴란드와 체결한 리가 조약, 1922년 독일과 체결한 라팔로 조약 등.

그러나 당시 볼셰비키 지도자들 중 누구도 이 자본가 정부들을 “평화의 친구들”이라고 선전하지 않았다. 또, 독일·폴란드·에스토니아 공산당들에게 이 조약들을 조인한 자본가 정부들을 선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대중을 혁명적 의식으로 각성시키는 데 이용했다.

그러나 인민전선 시기 스탈린의 코민테른은 정확히 그 반대의 주장과 실천을 했다.

“현재 국면에서 많은 자본가 국가들도 평화 유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국주의 전쟁의 위험에 맞서 노동자 계급과 모든 근로 민중 그리고 모든 국가들을 아우르는 광범한 전선을 창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1936년 5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이 ‘전선’은 제국주의의 현 상태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산당은 자본가 정당들과 동



레온 트로츠키

맹을 맺으려고, 세계 체제를 강타한 공황에 대한 혁명적 대안들을 모두 포기했다. 혁명적 변화에 관한 논의를 먼 훗날로 미루고 자본주의 수호 임무를 지닌 정부들을 “관용”으로 대했다. 이 관용은 노동자 운동을 억누르는 것을 뜻했다.

(반부)식민지 나라들에서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위해 노동계급을 이른바 ‘진보적 민족 부르주아지’에 예측시켰을 뿐 아니라 노동계급과 민족해방운동을 지구상 최대 식민제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종속시켰다(7차 대회는 6차대회에서 두드러졌던 반제국주의 미사여구들을 조심스럽게 거둬들였다).

스탈린은 1943년에 동맹국들에 보내는 우호의 표시로 코민테른을 해체했다.

산수와 역학

트로츠키는 인민전선이 고전적 멘셰비즘의 확장이라고 봤다. 그가 보기에, 1917년 2월 혁명이 인민전선의 역사적 사례였다.

1917년 2월에서 10월까지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은 자본가 정당인 카메츠와 연립정부를 구성해 긴밀하고 항구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볼셰비키는 인민전선에 조금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들의 요구는 좌파 정당들이 카메츠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고 진정한 노동자 정부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러시아의 인민전선을 제압했던 10월 혁명의 이름으로 각국의 인민전선들을 지원했다.

인민전선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정확히 산수의 법칙이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은 이렇게 말했다.

“단결한 노동자 세력(통일전선)이 민주주의자들과 및 자유주의자들과의 보다 넓은 선거적, 정치적 연합(인민전선)의 토대가 될 것이었다.

“독일의 세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연합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연합체, 즉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신념과는 상관없이 파시즘(또는 추축국들)을 첫째 위협으로 간주하는 모든 세력의 ‘국민전선’으로 단결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고려했다.”

노동자들의 단결에다 자유주의 자본가와의 단결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인민

전선은 공동전선의 진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트로츠키가 지적했듯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산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역학 하나는 더 필요하다.

“힘의 평행사변형의 법칙은 정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평행사변형에서 합력(合力)은 분력(分力)이 서로 다를수록 더 작아진다. 정치적 동맹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다면, 합력은 0과 같아질지도 모른다.”

인민전선은 이해관계가 180도 다른 적대 계급 간의 동맹이다. 그래서 동맹의 성립은 노동계급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

그래 갖고는 중간계급을 획득하지 못한다. 노동계급의 단호한 지도력 제공만이 중간계급을 획득할 유일한 방법이다.

노동계급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레닌과 트로츠키가 지도하던 초기 코민테른은 공동전선을 제안했다.

레닌과 트로츠키가 제안한 공동전선은 (1) 노동계급 정당들의 협력을 뜻했다. 반대로 인민전선은 자본가 정당들을 포함시키는 계급 협력 전략이었다. (2) 공동전선은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려는 투쟁에 필요한 실천적 협정이었다. 그러나 인민전선은 공통의 선거 강령과 자본가 정부 지지를 포함했다. (3) 공동전선에서는 완전한 이데올로기적 독립성과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인민전선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4) 공동전선은 혁명정당 활동의 한 부분이어서 다른 독립적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인민전선은 코민테른의 전체 전략이었다.

계급 연합 기구로서 인민전선은 파시즘을 저지하는 효과적 무기가 못 됐다.

예컨대, 1934년 프랑스에서 히틀러의 집권에 고무받은 파시스트들이 의회를 공격했다. 중도 좌파 정권이 몰락하고 강경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 이때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극우파를 수세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1936년에 주류 친자본가 정당인 급진당과 단결하려는 시도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관용’ 정책과 똑같은 결과를 낳았다. 짧은 소강기를 거쳐 우파가 다시 주도권을 쥐었다.

물론, 노동 대중에게 인민전선이 ‘제3기’(사회파시즘) 백치병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히틀러의 승리는 정치적으로 각성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단결해야 한다는 열망을 고무했다.

이런 단결 염원 정서 덕분에 인민전선의 첫 번째 국면에서 공산당들은 큰 이득을 봤다. 프랑스공산당의 당원 수는 1934년 3만 명, 1936년 2월 9만 명, 1936년 12월 28만 8천 명으로 증가했다. 스페인공산당의 당원 수도 1934년에 1천 명을 밑돌았으나 1936년 2월 3만 5천 명, 1937년 7월 11만 7천 명으로 증가했다. 당시 공산당들은 처음으로 중간계급 당원과 동조자를 대거 획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8년에 인민전선의 실적에 대한 환상이 깨지자 상황이 반전했다. 공산당들의 당원과 지지자가 감소했다.

최종적으로 인민전선은 파시즘을 저지하지 못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파시즘에 권력을 내 주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미국에서는 공산당이 민주당의 루스벨트를 지지해 최종 독립적인 정당 건설 전망을 포기하면서 우울한 결말을 맞이했다.

인민전선의 운명은 그래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였던 생 쥐스트의 예언, 곧 “혁명을 절반만 성공시키는 사람은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됐다.

김인식

코민테른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과 트로츠키가 주도해 1919년에 창립됐다. 레닌과 트로츠키가 지도하던 시절 코민테른(1~4차 대회)은 혁명적 전통의 보고였지만, 1924년 이후 스탈린이 지도한 코민테른은 스탈린 정권의 외교 수단으로 전락했다. 7차 대회가 마지막 대회였다.

Report@left21.com

곳곳에서 투쟁과 저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2월 6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씨앤엠지부

신생노조의 첫 파업 승리

신생노조인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씨앤엠(C&M)지부가 35일간의 파업을 통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연매출 국내 3위의 케이블TV 회사인 씨앤엠 사측은 최근에도 3천9백30억 원을 들여 GS강남방송과 울산방송을 인수하는 등 몸집을 불리면서도, 노동자들에게 동종업계 평균의 65퍼센트밖에 안 되는 저임금을 강요해 왔다. 설치/AS 분야를 외주화하겠다고도 협박했다.

그러나 노조는 10월 5일부터 두차례 파업을 벌여 고용보장과 내년도 임금 12퍼센트 이상 인상을 약속받았다. 복지 개선과 노조 활동 시간·장소도 보장받았다.

씨앤엠 노조 김시권 사무국장은 “출산을 앞둔 조합원까지 파업에 참가할 정도로 조합원들이 단결했기에 승리가 가능했다”고 기뻐했다.

“신생노조인 우리는 이번 투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노동자들이 단지 회사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이 사회와 싸우고 있음을 알게 됐다. 지회별로 재능노조 투쟁이나 플트플렉 노조 투쟁에 연대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에도 함께하려 한다.”

이종우

동국대 시설관리노조

동국대 시설관리노조가 출범하다

11월 13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동국대학교 시설관리분회 출범식이 열렸다.

학교 당국의 회유와 협박에도 미화원 노동자 1백10명 중 1백여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학교 측의 감시에도 굴하지 않고 조합원 전원이 출범식에 참석할 만큼 자신감이 높았다.

동국대 미화노동자들은 학교 내에서 굶은일을 도맡아 왔지만, ‘유령’ 취급을 받아야 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부당한 처우, 낮은 임금과 잦은 임금체불로 불만을 쌓아왔다. 집안 경조사가 있어도 휴가조차 낼 수 없었고, 청소도 구조차 사비로 구입해야 했다.

이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것은 ‘유령’이 아닌 ‘인간’임을 인정받으려는 출발이다.

이날 출범식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당 중구위원회, 진보신당 종로중구협의회, 다함께 중북부지구가 참석해 지지와 연대를 보내 큰 박수를 받았다.

무엇보다 동국대 총학생회와 학생들의 참석은 노동자들을 고무했다.

유병규

쌍용차, 마힌드라 매각



11월 17일 금속노조 상경투쟁단이 장기투쟁 작업장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매각 말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11월 23일 쌍용자동차와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 마힌드라, 산업은행은 철저히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해 졸속 매각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살인 진압으로 생계와 삶마저 빼앗겼고, 회사는 이미 ‘상하이 먹튀’로 만신창이가 됐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회계와 장부까지 조작한 장본인들이 그 더러운 손으로 버젓이, 또 다시 매각 본 계약서에 서명했다. 노동자를 우롱하고 사법질서까지 문란케 한 회대의 사기극이다.

상하이차 매각 또한 지금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기술 유출, 국부 유출로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고통만을 주고 자국으로 도망친 상하이차 매각

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쌍용차 본 계약은 또 다른 피해자를 찾으려는 신호탄에 불과하다. ‘상하이차 매각’의 불어뻘인 이번 본 계약체결은 갈등의 종식이 아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다. 구속자 문제, 손배가압류, 회계 조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고자를 탄압하고 배제하는 것으로는 쌍용차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형클어진 실타래를 풀려면 가장 억압받고 탄압받고 고통받는 부분부터 푸는 것이 순리이며 이치다.

그런데 48일간 산업은행 앞 노숙농성을 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진압과 구속과 농성장 철거였다.

그러나 우리는 탄압을 느낀히 견딜 것이다. 해고자·무급 휴직자·비정규직 노동자 원직 복직, 기술 유출 진

실 규명, 8·6 노사합의 이행은 마땅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제2 졸속 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는 이번 본 계약 체결이 쌍용차 매각의 완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 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기만한 이번 체결은 결코 원만하게 결론 맺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해고자 원직 복직 회피와 대국민 약속 불이행이라는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매각에 우호적인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파산법원 인가, 관계인 집회 등 향후 모든 매각 일정에서 적극 투쟁할 것이다. 해고자 원직 복직, 기술 유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획실장

심야 테러 배후 현대중공업은 사죄하라

현대미포조선 현장 활동가인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이 1년 10개월째 현대중공업과 경찰청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활동가 16명은 사내하청 노동자 30여 명의 복직 투쟁에 연대한 바 있다. 4개월 만에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복직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져 원하청 복직 연대 투쟁은 종결됐다.

하지만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심야 테러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2009년 1월 17일 울산에서 영남노동자대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방해를 뚫고 현대중공업 소유 소각장 굴뚝에서 고공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비상 물품을 전달했다.

그날 밤 11시반 경 오토바이 헬멧으로 복면한 현대중공업 경비대 50~60여 명이 소화기와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굴뚝 밑 농성장에 쳐들어 왔다. 그들은 김 의장을 지목해 집중 테러를 가하고 농성단 차량을 부수고 농성장 주변 물품을 모두 불태우고 도주했다.

당시 주변에는 경찰 30여 명이 있었으나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경찰의 직무유기에 항의하려고 노동자들이 울산 동부경찰서를 찾아가셨을 때 경찰들은 현대중공업 경비대원들과 커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경찰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뒤 김석진 의장과 아내 한미선 씨는 현장 투쟁과 유인물 배포, 1인 시위 등을 하며 현대중공업과 울산지방경찰청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고, 현대중공업 소유주인 정몽준 의원이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현대중공업과 경찰청은 묵묵부답일 뿐이었다.

하지만 김 의장은 10년이 걸리더라도 이 사건을 사주한 현대중공업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한다.

“민약 노동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경비대를 테러했다면, 우리들은 해고는 물론이고 살인미수와 방화 혐의로 모두 중형에 처해졌을 겁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울산에서는 테러의 두려움으로 누구도 심야에 투쟁 작업장과 농성장 등을 출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테러 후유증도 이겨 내고 투쟁하는 김석진 동지와 최근 폐암 수술 후 회복 중인 아내 한미선 씨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정동석 현대자동차 노동자

법원노조

법원본부장 해고는 부당하다

법원 징계위원회가 11월 16일 전국공무원노조 오병욱 법원본부장을 해임했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나올 당시 오 본부장이 일요일에 열린 합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해임 사유다.

징계위는 이 집회 참가가 공무원노조법 제4조 ‘정치 활동의 금지’를 위반했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정했지만, 이것은 결코 정치 활동과 무관하거나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정부에 맞설 수밖에 없고, 정치운동 속에서 힘을 결집하며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것이 투쟁의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태까지 벌금 2백만 원 형을 받았다고 해임된 경우는 없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의 해임 소식에 지금 법원 내부통신망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조합원들의 댓글이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고, 본부장의 단식농성을 안타까워하며 응원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이번 해임 징계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탄압을 단결 투쟁의 기회로 삼아 조합원의 분노를 모으고 있다.

양윤석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재능교육

재능 교사들의 질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잇따른 장기투쟁 승리에 힘입어 1천 일 넘게 지속된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투쟁도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은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인근 재능사옥 앞으로 농성장을 옮기고 투지를 다지고 있다.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늘어났고, 매일 출근·중식 홍보전, 저녁 촛불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측의 아비한 공격은 사람들의 분노를 키웠다. 재능교육 사측은 농성과 집회, 불매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손해가압류와 무차별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최근에는 가처분에 따른 압류로 조합원의 냉장고를 비롯한 가재도구까지 경매에 넘기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용역강패까지 동원해 해고와 탄압을 강행하는 재능자본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기륭전자·동희오토의 바통을 이어받아 승리해야 한다.

이재환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노동법 개악 공격 시도

최근 한 달간 노동자 두 명이 구조조정 반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분신해 사람들의 가슴을 절절하게 했다.

그런데 이에 아랑곳 않고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을 더 위험한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을 노동법 개악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시킬 ‘직업안정법개정안’과 실질 임금을 삭감하고 궁극적으로는 해고를 자유롭게 할 ‘근로기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직업안정법 개악안의 핵심 내용은 직업 소개, 직업정보 제공, 복합고용서비스 사업을 민간에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력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고용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문제인 파견·용역·하도급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기업주들에게는 경기변동에 따라 해

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안이 되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직업불안정법’이고 ‘비정규직 활성화법’인 것이다.

최근 입법예고한 또 하나의 개악안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에 초과 근로수당 없이도 40시간 이상 일하게 만드는 일종의 변형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이번 개악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취업규칙)에서 1개월로, 3개월(노사합의시)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려 한다.

민주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가 “사용자들 입맛대로 몰아서 과중한 일을 시키거나 일감이 없다는 핑계로 쉬게 하여, 노동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서, “노동환경을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속셈”이라고

폭로했다.

노동부가 새로 도입하겠다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초과노동을 조장하고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 없앨 뿐”이다.

결국 이번 개악안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고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두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영일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서평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

서평



최근 헌병청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원직을 사퇴한 조국 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인기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이다.

조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해마다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책을 한 권씩 냈다. 특히 <오마이뉴스> 기자 오연호와 대담한 내용을 녹취한 신작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은 이명박 정부를 교체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그전에 낸 두 책(《성찰하는 진보》(지성사), 《보노보 찬가》(생각의 나무))의 요지를 반복하면서 2012년(또는 2017년)에 어떻게, 무슨 정책으로 정권을 교체할 것인지 다뤘다. 솔직한 주제다.

그런데 그의 '플랜'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그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은근슬쩍 '진보'에 끼워 넣는다. 민주당·국민참여당과 진보세력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진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시종일관 '진보·개혁진영'을 한데 묶어 주어로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부당한 서술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가령, "진보·개혁 진영이 두 차례 권력을 장악"했고, '진보·개혁 진영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해서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들을까 봐 포기했다'는 식의 서술 등이 그렇다.

이것은 민주당·참여당에나 해당되는 말이지 진보세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위의 개혁 과제를 놓고 서로 다른 계급을 대변해 투쟁을 벌였다.

조국은 진보의 편에 서서 민주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논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계급적 차이를 흐리고 한뼘줄 취급하며 공평무사한 조언을 하는 위치에 선다. 그래서인지 조국은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이 보인 배신과 뒤통수 치기를 거의 거론하지 않는다.

조국은 두 '민주정부'에도 매우 호의적이다. 그는 아쉬움을 표하기는 하지만, 두 정부가 꽤 많은 개혁을 이뤘다고 평가한다. 특히, 조국은 김대중·노무현 시절(국가보안법 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민주화가 "만개"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시대에 노무현에게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적잖지만, 진실을 직시



《진보집권플랜》
조국·오연호 | 오마이북 | 15,000원

해야만 진정한 대안을 창출할 수 있다. 2004년 탄핵정국 직후 열린우리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했음에도 4대 개혁 입법은 누더기가 돼 좌초했다. 그후 FTA반대 시위는 원천봉쇄 됐으며, 이라크 파병도 계속됐고, 구속 노동자 수는 급증했다. 대중이 노무현 정부에 등을 돌린 까닭이다.

접착제

조국의 '집권 플랜'의 종착지는 반MB 민주연합 정부다. 그는 이를 위한 "접착제" 구실을 자처한다.

그는 "장기적으로 '빅텐트' 안에 다 들어가는 선택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지만, 당장은 2011년까지 "소통합"하고 이후에 민주당부터 진보세력까지 모두 선거연합을 하자고 한다.

소통합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합치고, 진보정치 세력이 합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민주당은 그대로 두고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을 다 합치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연합 전략은 우파에 맞서는 효과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대중에게서 심판받았고, 아직도 의심받고 있다. 7·28과 10·28 재보궐 선거에서 대중이 민주당에 보낸 싸늘한 시선을 떠올려 보라. 무엇보다 그들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공범이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서러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그 뿌리가 있다.

그런데도 진보세력이 민주당과 한 배를 타는 것은 진보의 신뢰를 실추시킬 뿐



노무현 정부를 "진보·개혁 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정부 아래서 투쟁한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다. 무엇보다 우파를 막으려면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에 압도돼, 노동계급 투쟁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최근 KEC 파업에서 민주당이 점거파업을 중단시키고 민주노총·진보정당 지도부가 이에 동조한 것은 계급 동맹의 불길한 미래를 보여 준다.

진보의 성찰 과제

조국은 집권을 위해 진보진영에 몇 가지 변화를 촉구한다. 그 핵심은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민주노총과의 관계 문제다. 사실상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같아서면서 내세운 핵심 명분 즉, "종북주의"·"민주노총당" 반대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노총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데 소홀한 것이나, 진보진영 내 자주파가 북핵에 무비판적이고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하

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조국이 이 문제들에 내놓는 대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령, 조국은 2007년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최기영 당원을 출당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탄압에 투항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은 "정규직은 이미 '강자'"라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양보하는 사회연대전략을 주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순이익의 2조 9천억 원을 낸 정몽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돈을 투자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이 대안일까, 아니면 정몽구 월급의 세발의 피도 안 되는 정규직 노동자가 자기 월급을 쪼개는 것이 대안일까.

"말랑말랑한 힘"

조국은 진보가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 무능하다고도 비판한다. 그러나 그가 다

루는 모든 분야에서 엄연히 진보적 정책과 대안이 존재한다. 진정한 문제는 그가 당장 실현가능하고 손에 닿는 정책만을 유효한 대안으로 취급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인지 조국은 종종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에 지나치게 타협하는 주장을 한다.

가령, 조국은 학벌체제를 비판하지만 동시에 '서울대 폐지'와 대학 평준화에 사실상 반대한다. "월드컵 축구 32강에 걸맞는 '세계 32강 대학'이 몇 개는 있어야" 하고, 한국 대학들이 "세계의 대학과 경쟁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WTO나 FTA에 대해서도 "한국이 '통상국가'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도 "국제역학관계"상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한미동맹의 '평등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2004년에 진보진영이 국가보안법 위반 폐지를 주장한 것도 불필요하게 '원리주의'적인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면 새로운 인력의 취업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기업주들의 논리를 수용하기도 한다.

조국은 "혹자는 나에게 '개량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겠지만, '개량'마저 성취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도 없이 강경한 구호만을 외치는 것은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말랑말랑한 힘"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의 책 어디서든 계급투쟁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개혁주의자와 혁명가들의 진정한 차이는 개혁을 성취하는 방식에 있다. 개혁은 투쟁 없이 성취하기 어렵다. 대중의 필요를 우선에 놓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 가능한 선에 맞춰 요구를 제한하면 개혁의 취지는 훼손되기 십상이다. 이것이 바로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노무현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면서 급속히 지지를 잃은 이유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맞선 대안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자들이 사기를 회복하며 곳곳에서 투쟁을 벌이는 지금, 이 투쟁을 지원하면서 진보적 과제를 쟁취하는 데 힘을 모으는 진정한 '진보 플랜'이 필요하다.

최미진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7호(2010년 가을)
가격 : 16,000원

문의 전화 02-2268-7608 marx21@marx21.or.kr http://www.marx21.or.kr

심층 인터뷰 유럽 반자본주의 좌파 활동가 인터뷰 유럽의 재정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 투쟁
특집 트로츠키 사망 70년
트로츠키는 살아 있다! - 전기 작가 로버트 서비스의 왜곡에서 트로츠키 구하기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기원

논쟁 보험료 우선 인상론 비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이를 것인가?
현대 진보사상 조류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인가?

쟁점 G20 - 세계 민중에게 고통 전가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반자본주의신당 NPA - 프랑스 급진 좌파의 새로운 자명

시리즈 기획 한국 경제 ③ 한국 진보진영의 경제 대안 논의

서평 《복지국가혁명》,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활해》,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론과 실천
《전환하는 결혼》 결혼은 영원 불변이 아니다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2년 120,000원	3년 180,000원
5년 300,000원	7년 420,000원	10년 600,000원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동부 사회포럼
장하준의 발전국가 모델 - 한국 경제의 대안인가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1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여성능력개발원 3층 1강의실 (건대 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1천5백 원)
문의: 010-9372-2746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비정규직 차별, 어떻게 끝장 낼 수 있을 것인가
일시: 12월 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3분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음료제공)
문의: 070-8113-8541 / 010-8481-2626

서울 남부 사회포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연사: 이정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12월 9일 (목) 저녁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02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건물 6층)
참가비: 3천5백 원 (학생 2천5백 원)
문의: 010-2401-1987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atgwestmail@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ibforum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2010 일사: 12월 2일(목) 오후 6시~10시
장소: 용산 철도웨딩홀

다함께 후원의 밤

다함께 02-2271-2395 www.alltogether.or.kr
alltogether@alltogether.or.kr
후원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아프가니스탄의 재앙을 4년 더 연장한 서방 정부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나토정상회의가 11월 2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다.

나토 수뇌부들은 학살을 4년 더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만, 군수 물자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필수 서비스와 수백 개의 일자리가 파괴되는 것은 특히 역겹다.

전쟁을 연장하려는 계획으로 2011년 7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는 오바마의 약속은 우습게 됐다.

이 계획은 데이비드 캐머런과 노동당 당수 에드 밀리밴드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15년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허튼 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해 줬다.

리스본 나토정상회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자국의 안보 책임을 4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뜻하는 “이행 계획”을 내놓았다.

미군 주도 나토군은 아프간 남부의 칸다하르와 헬만드 주에 최소 2년 이상 주둔하게 될 것인데, 주둔 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 거의 분명하다.

이러한 계획이 끔찍한 시나리오로 들리겠지만 영국 육군의 신임 참모총장인 데이비드 리처드 경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알 카에다와 그 연계 조직들”이 제기한 위협은 영국의 국가 안보가 최소한 30년 동안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임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슬람의 호전성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었고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토 사령관이 있다면 그는 미국 외교관계위원회가 조직한 연구 그룹의 최근 보고서를 읽어봐야 할 것이다.

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탈레반의 저항이 9·11이후 미국이 침공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하다.



아프가니스탄을 정찰 중인 미군 병사 “올해가 서방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가장 끔찍한 해”

“나토군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대중의 지지는 수년 동안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사라지고 있다.

“경제는 30년 이상의 전쟁으로 황폐화돼 사람들을 부양할 만큼 회복되지 못했고, 정부는 부패해 거의 쓸모가 없다.”

이것은 미국 지배계급의 심장부에서 나온 분석이다.

조지 부시 2세 아래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빌 클린턴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샌디 버거가 외교관계위원회의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존 네그로폰테도 여기에 속해 있는데, 그는 1980년대에 미국이 니카라과에서 벌인 야만적인 전쟁의 핵심 인물로 나중

에 부시 정부의 이라크 주재 대사가 됐다.

이런 [회의적] 분석은 미국 지배계급 내의 한 가지 분열상을 보여 준다. 그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을 겁주려면 미국의 군사적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그런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이들 사이의 분열이다.

모험

“미국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투자가 가능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그러한 노력이 성공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고 외교관계위원회의 보고서는 말한다.

그 보고서는 미국이 “야망을 줄이고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규모를 축소”해

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철수가 아니라 특수부대가 이끄는 1만에서 2만에 이르는 병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전선에서 온 최근의 보도를 보면 주둔 규모 축소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벤 길버트 기자는 미군이 ‘드래곤 스트라이크 작전’이라고 불리는 칸다하르에서 벌이는 군사 작전의 최근 단계를 수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민간 건물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래리 브렐랜드 상사는 “나는 그토록 많은 폭발물들이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는 이라크에 두 번이나 파병된 경험이 있는 17년차 고참이다. 점령군은 탈레반이 길에 매설한 많은

지뢰를 제거하려고 “지뢰 제거 선행 폭약”의 머리글자를 따 “MICLIC”라 불리는 무기를 사용한다.

길버트에 따르면 “그 무기는 우레처럼 지축을 흔드는 폭발 한 번에 3백 피트 넓이 지역의 지뢰를 제거한다. 이것은 탱크 한 대가 지나가기 충분한 넓이다. 브렐랜드는 그의 중대장 마이크 골드 대위가 하루에 16대의 ‘MICLIC’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출격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미 해병대도 칸다하르에 인접한 헬만드 주로 공격적으로 진격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상당한 사상자를 냈다.

“올해가 서방 군인들과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모두에게 9년 동안의 전쟁에서 가장 끔찍한 해가 되고 있다.

“약 한 해 전까지 북부는 상대적으로 평온했지만 탈레반과 다른 세력들이 여러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해 주요 나토군 보급로를 위협하고 서방이 남부로 진격하는 데 필요한 물자 조달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한편, 미 공군이 제시한 수치를 보면 지난 6월 페트레이어스가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은 이후 2천6백 회의 출격이 있었다.

10월에 미 공군은 매일 30회 이상 파괴적 공습을 하는 등 총 1천 회 출격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10년째로 접어들었다. 야만적인 점령으로 아프가니스탄 사람 수만 명과 서방 군인 2천 명 이상이 죽었다.

전쟁이 계속되면 수천 명 이상의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무의미하고 이길 가능성도 없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해 모든 외국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복지가 필요하다.

출처 영국외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이상우

산재보험료 아끼려 건강보험 재정 갹아먹는 기업들

한국 기업주들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을 적게 내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는 기업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노동자들이 내는 것보다 1.7배 더 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업이 노동자가 내는 보험료의 4분의 3 정도밖에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진보진영은 오래 전부터 기업 부담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또 하나 있다. 한국 기업들은 마땅히 내야 할 산재보험료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받아야 할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재보험료를 아예 안 내는 것이다.

일하다 다친 것은 현행 제도상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돼 있고, 이 비용은 1백퍼센트 기업이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건수가 총 9만 3천 건으로 1백80억 원이 부담하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쓰여 환수 조처했다고 한다.

많은 한국 기업들은 노동자를 강제해 이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게 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비를 대신 내 주거나, 아니면 아예 노동자 자신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어차피 사고당한 노동자가 내는 돈은 없으므로 관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기업이 1백퍼센트 부담해야 할 치료비의 절반을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기업과 노동자가 절반씩 낸다.

떠넘기기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기업이 갈취하는 꼴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비정규직, 소규모 작업장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나머지 치료비도 당연히 본인 몫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갈취에 더해 사고 당사자의 치료비 부담도 생긴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천의대 임춘 교수 등이 2007년에 시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06년 한 해에 일하다 다친 업무 중 사고 사례는 1백8만

건인데 그해에 실제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사례는 8만 9천여 건밖에 안 됐다.

실제 산재 처리해야 할 건수의 12분의 1만이 산재 처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건강보험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까지 추계되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업이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부리는 또 하나의 꼼수는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떼먹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규모는 비공식적인 추계로 2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기업이 이들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아 떼먹는 돈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기업부담비용을 OECD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산재를 책임지지 않고 ‘사기’와 ‘꼼수’로 건강보험 재정을 갹아먹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문제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왜 진술 거부를 해야 하는가

요즘도 이명박 정부의 탄압 속에 연행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경찰·검찰에 연행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왜 진술 거부(묵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전투적으로 투쟁하고 급진적 주장을 펴는 사람이나 조직들마저도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술 거부는 국가 탄압에 직면한 사람들이 채택해야 할 기본적인 투쟁 방법이다. 진술 거부는 탄압에 맞서 운동과 조직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저들에게 집시법 등 각종 악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증거와 단서를 주기 때문이다.

또 저들은 우리의 진술을 토대로 운동과 조직에 대한 공격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몇몇하면 말하지 못할 게 뭐냐’, ‘사실을 인정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한다.

그러나 오랜 경험을 통해 드러난 것은 그런 진술이 경찰·검찰이 탄압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이다. 그것은 추가 연행과 더 큰 공격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실제로 올해 초 경찰이 진보정당 정치 후원금을 조사할 때 우리 편의 진술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아서 전교조·공무원노조는 진술 거부로 방침을 바로잡은 바 있다.

그래서 진술 거부는 한국에서 군부독재 때부터 ‘공안’ 당국에 맞서는 활동가들의 중요한 투쟁 지침이었다.

심지어 2006년 〈한겨레〉에 ‘수사 받는 법’이란 글을 기고했던 당시 현직 중앙지검 검사(금태섭)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묵비를 강조한 바도 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 억울함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찾아내서 수사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거부해야 한다.

전지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영국 학생 사회주의자가 최근 영국 학생 투쟁을 말한다

“학생 투쟁이 노동자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서섹스대학 점거 투쟁에 참여했던 소냐 코웰린(아래 사진)이 최근 영국 학생 투쟁의 의미와 가능성을 〈레프트21〉에 말한다. 코웰린은 현재 교환 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와 있다.

“보수당-자유민주당 연정은 지금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긴축 정책을 추진합니다. 긴축 규모는 대처 정부 때보다 더 큼니다.

교육 부문 공격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표적을 미리 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경영학·경제학 등 ‘돈이 되는’ 분야를 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일차 공격 대상은 비판적 사고를 약간이라도 고취하는 분야였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학생 수가 많지 않고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영국 최고의 철학파로 손꼽히는 런던 미들섹스대학 철학과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들섹스대학 철학과에는 사회 비판적 철학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 모순에 문제 제기하는 과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인문 학뿐 아니라 환경 관련 학과도 폐쇄했습니다. 저들은 입으로는 환경 보존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관련 학과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육 부문 공격이 이제 영국 교육기관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거

1990년대 이래 영국 학생운동은 대규모 투쟁을 벌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문제뿐만 한정하지 않고 본다면, 학생운동은 2008년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반대 투쟁부터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큰 시위를 벌였고 대학 30여 곳을 점거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점거는 최근 영국 학생운동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투쟁으로 영국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사회적 파장력이 큰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학생들은 훨씬 투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첫 예산 삭감이 발표되자 가자 연대 투쟁을 벌인 경험이 있던 대학들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있는 서섹스대학을 포함해 일부 대학에서는 점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점거 투쟁에 참가한 학생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투쟁을 통해 더 큰 운동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제 생각에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 학생 회원들을 포함해 학생 활동가들이 일상적으로 벌인 노력이 이런 정서를 운동으로 연결하는 데서 결정적 구실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투쟁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말하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대학에서 우리는 매우 다양한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면서 온갖 문제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의 투쟁에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연대를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쌓여 1968년 이래 영국에서 가장 큰 학생 시위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월 10일 런던 말뱅크 타워에 있는 보수당사를 점거한 학생들

물론, 갑작스레 큰 투쟁이 폭발한 데는 직접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등록금을 9천 파운드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자민당에 느낀 배



신감이었습니다. 자민당은 선거 운동 기간에 집권하면 결코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투쟁을 폭발시키는 방아쇠 구실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전투성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심지어 혁명가라 할 수 없는 녹색당조차 거리 시위에서 ‘계급 전쟁’을 외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의 공격 규모가 워낙 크고 공격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생운동의 중요성은 단지 당면 요구를 성취하느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공격받는 다른 부문의 행동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행동을 자극할 가능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쟁을 벌이는 학생들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교육 삭감 반대 운동

11월 24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2만여 명이 전국 도심에 집결해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와 대규모 시민불복종 행동을 벌였다. 이 글은 이른바 “X 데이”로 알려진 이 시위 직전에 영국 전역에서 건설되는 학생들의 삭감 반대 운동을 취재한 것이다.

11월 10일 런던에서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벌인 행진과, 밀뱅크[보수당사]를 점거한 전투성과 활력이 삭감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크게 고무했다.

이것은 운동의 시작이었다. 그 뒤 점거와 시위가 잇따랐다.

보수당은 교육을 난도질하고 있다. 1년 등록금을 9천 파운드(약 1천6백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학에서 쫓아낼 것이다.

교직원 감원과 학과 폐쇄는 모든 것을 엄격하게 삭감하겠다는 뜻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가난한 대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유지수당도 폐지하려고 한다.

부총리 닉 클레그의 선거구인 셰필드에서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인상한 자유민주당의 배신에 분통을 터뜨렸다.

셰필드 대학교 철학과 신입생인 맥

스 보피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렇습니다.

“동맹휴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반즐리 대학과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학생회는 처음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 학교에서 시청까지 행진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강사들도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실질적 도움이 됐어요.”

호의적

학생들은 이달 초에 BBC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피켓라인[대체인력 투입과 파업 대요 이탈을 막는 대열]에 참가했다.

맥스는 “X 데이가 노동자들에게 지금이 파업에 돌입할 때라는 신호를 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하고 말했다.

잉글랜드 동북부에서는 히튼 매너 학교, 고스포스 고등학교, 롱벤턴 커뮤니티 대학, 뉴캐슬 대학, 게이트헤드 대학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삭감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공

예컨대,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점거 투쟁을 벌였을 때 우리는 학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우리 투쟁이 사회적 파장력을 가지려면 학내 노동자들뿐 아니라 지역 노조와 노동자 들에게도 연대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학생과 교직원, 강사들의 투쟁들을 결합하기 위해 ‘교육투쟁네트워크’를 건설했습니다.

또, 우리는 학생들의 투쟁을 정부의 전반적인 긴축정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내 학교, 내 지역 투쟁뿐 아니라 전국적인 긴축 반대 투쟁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실, 학생들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출발점은 강사들이었습니다.

동으로 조직했다. 그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 구절이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려고 우리는 여기에서 투쟁한다.”

잉글랜드 남부에서는 10개 중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이 본머스에서 집결해 시청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식스 폼[영국에서 16~18세 학생들이 다니는 2년간의 대학 입시 준비 과정]과 대학의 학생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해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뜨고 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동맹휴업과 시위를 조직하는 중고등학생들의 규모다. 2003년 이래 볼 수 없었던 규모다. 당시 중고등학생 수천 명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해 동맹휴업을 했다.

번머스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 리즈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중에는 이달 초 런던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이 그 광경을 TV에서 봤다며 자신들도 그 시위의 일부였으면 했어요.

“많은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공동으로 아주 멋지게 조직했습니다. 사람들이 더는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생

강사들만 긴축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미화 노동자, 경비, 도서관 사서들 등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긴축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같은 문제로 싸우는 다른 학교 학생과 노동자들과도 연대하려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 투쟁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학생들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생산하는 사람은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잠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이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호소하는 것이 자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용욱
※ 인터뷰 전문은 www.left21.com을 보시오.

들도 우리와 함께하려 합니다. 당연히 이번에는 다 함께 할 것입니다.”

프랜체스카 바이런은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교의 학생이다.

그녀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밀뱅크 점거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줬어요.

“삭감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지지한다고 많은 노동자들이 말했습니다.

“시위에 못 갔던 많은 학생들이 점거 얘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점거는 확실히 사람들을 운동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학생운동의 전투성 증대는 커다란 장점 중 하나다.

시위와 동맹휴업을 조직하는 모임이 중요한 노동계급 부문을 단결시켰다.

학생들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노동자들이 학생만 싸우도록 놔두서는 안 된다.

교육·보건·교통·주택·지방정부·제조업·예술 분야 가릴 것 없이 우리는 보수당이 원하는 피에 주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단결해 투쟁해야 한다.

시안 루딕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